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李鴻培 · 金良姬 · 金恩志 · 程勳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政策研究 03-09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FTA 정책을 중심으로

2003. 12.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이것은 지금의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용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기본적으로 무차별 원칙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의 더딘 진척과 EU-NAFTA 등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는 자유무역과 지역주의의 양대 기류가 교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무역협정이 EU와 NAFTA라는 2개의 축으로 집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가지고 급부상하고 있으며, 통화위기 이후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경제는 지역주의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FTA 중심의 양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동적 자세로 일관해 오던 다자간 통상규범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전개해 오던 수출장려와 수입대체로 대표되는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기조가 한계를 노정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침내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는 重層的 통상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기조변화는 2002년 일·싱가포르 FTA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원의 이홍배 박사를 중심으로 김양희 박사, 김은지 전문연구원, 인천대학교 정훈 교수가 집필한 연구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통상정책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으며, 현시점에서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가를 주요 지역별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통상정책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우리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독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소중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던 채욱 부원장, 왕윤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김박수 선임연구원, 송유철 연구조정실장, 건국대학교 임천석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박사 등 원내외 심의위원과 자료수집 및 편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안태경 팀장과 조주희 연구조원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FTA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 통상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한·일 FTA 및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논의 전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통상환경 및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세계 통상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환을 모색하는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 및 주요내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FTA 정책을 근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주요 지역별로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對구미 지역 통상정책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중 특히 미국은 일본에게 있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므로, 對美 통상정책은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對아시아 정책이 ODA 중심에서 FTA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특성을 파악한 후, 특히 중국, ASEAN,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역내국에 대한 양자간 FTA 정책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전개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전반적인 對중남미 통상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최근 FTA 추진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멕시코와 칠레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FTA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에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전체적인 측면과 對日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일본은 세계적인 FTA 체결 조류를 직시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다자주의와 병행하면서 양자간 FTA를 중핵으로 하는 지역주의로 적극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시아의 성장 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아시아 통화위기 등을 계기로 과거와 달리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인 對아시아 통상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즉 일본의 통상정책은 FTA를 핵심 통상정책 수단으로 하면서도 그 대상지역은 아직 아시아와 중남미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여전히 WTO 체제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시아 내에서도 특정국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및 지역간의 균형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일본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노력하는 이유는 일본의 지역별 경제관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여전히 역외의 미국이며, 미국은 일본과 안보동맹관계에도 놓여 있어 일본에 있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아울러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EU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및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EU와의 접점은 아직 WTO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이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미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첨단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강국이며,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가진 시장으로서, 對美 관계의 중요성은 당분간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는 E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도 지역주의화 추세에 편승한다 하더라도 이와 함께 여전히 중요한 역외시장인 미국, EU 등과의 관계유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은 중국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對中觀은 기회론보다 위협론을, 낙관론보다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FTA 혹은 한-중일 FTA 체결을

선호하는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對中 전략은 우리의 對中 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보다 더 균형잡힌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의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나아가 ASEAN, 러시아, 미국을 포함하여 각각이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관계유지가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重層的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및 FTA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對日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WTO 체제에서는 일본과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도모하는 정책적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협력하에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에 대한 급격한 관세인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무리한 관세상한선 설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인하를 적게 하는 대신에 허용해야 할 저율관세수입량(TRQ)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아직도 협력의 의의가 크다는 사실은 한일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때 한일 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 출발점에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의 리더십 발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촉구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FTA를 통한 일본의 리더십 발휘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국내에서 부품·소재산업의 인식전환과 감정적인 對日 감정의 지양을 적극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FTA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이를 양국이 어떻게 서로 긴밀한 협의하에 공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일 FTA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한다면, 한·일 FTA는 양국 모두에 결코 전략적인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며 주변국으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한·일 FTA가 초래할 負의 효과를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FTA에서 상쇄하지 못하고 한·일 FTA만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일본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든간에, 일본과 중국이 서로간에 견제와 배제를 지양하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일본이나 중국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보다는 한·일 및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일본과 중국 모두에 FTA 경쟁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동아시아 FTA 구상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일·중간 FTA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일·중 FTA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일본과 중국이 FTA 체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어느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FTA 전략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므로 주요 경쟁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체결시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체결시의 불이익도 감안하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차 례

- 서 언 5

- 국문요약 7

- 제1장 서론 17
 - 1. 연구의 목적 17
 -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 제2장 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23
 - 1.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23
 -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26
 - 가. 戰後 연대별 추이 26
 - 나.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30

제3장 對구미지역 통상정책 38

- 1. 對미국 통상정책 38
 - 가. 개관 38
 -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39
 - 다. 향후 전망 52
- 2. 對EU 통상정책 54
 - 가. 개관 54
 -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55
 - 다. 향후 전망 64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 66

- 1. 개관 66
- 2. 對중국 통상정책 69
 -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69
 - 나. 향후 전망 80
- 3. 對ASEAN 통상정책 82
 -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82
 - 나. 향후 전망 95
- 4. 對한국 통상정책 97
 -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97
 - 나. 향후 전망 109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 111

- 1. 개관 111

2.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113
가.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113
나. FTA 논의현황과 주요현안	116
다. 향후 전망	125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27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과 전망	127
가. 통상정책의 특징	127
나.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135
2. 일본 통상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43
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143
나. 對日 대응방안	148
참고문헌	155
Executive Summary	161

표 차례

<표 2-1>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적 통상환경 및 통상정책의 변화	29
<표 2-2>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3년 12월 현재)	36
<표 3-1> 미·일 통상문제의 시대적 구분	42
<표 3-2> 국별 WTO 분쟁해결 절차 이용실태	44
<표 3-3>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low)	47
<표 3-4> 일본의 對美 직접투자 추이	47
<표 3-5> 일본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	49
<표 3-6> 일본의 對EC(EU) 무역 추이	57
<표 3-7> 일본의 對EU 직접투자 추이	61
<표 4-1> 일본의 對中 무역패턴 및 구조변화	71
<표 4-2>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실행기준)	74
<표 4-3> 일본의 對ASEAN 직접투자 추이	85
<표 5-1> 일본의 對중남미 수출입·비중의 추이	114
<표 5-2> 1990년대 일본의 對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115
<표 5-3> GATT/WTO에 통보된 중남미국가의 FTA 체결 현황	117
<표 5-4> 일·멕시코 FTA 논의 현황	119
<표 5-5> 일·칠레 FTA 논의 현황	120
<표 5-6> 관세인하를 둘러싼 양국간 협상 개요	124

그림 차례

<그림 4-1> 일본의 對아시아 중시정책 추진에 대한 개념도	67
<그림 4-2> 일본의 중화경제권 다자간 무역구도 개념도	72
<그림 5-1> 일본의 對멕시코 수출입 현황과 무관세 범위	12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정책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으며, 현시점에서 그 내용 및 특징은 무엇인지를 주요 지역별로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통상정책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는 우리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양국 경제개발전략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본 통상정책의 고찰은 우리의 통상정책 평가시 유용한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은 고도성장기 수출장려와 수입대체로 대표되는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강력히 구사해 온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미약한 부존자원, 협소한 국내시장과 구매력,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핵심기반기술의 취약이라는 초기조건을 감안하여, 핵심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제개발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산업통상정책은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유사하게 수출주도라는 점에서 대외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수입대체를 지향하는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어 왔다. 그로 인해 한국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의 형성과 발전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왔다.

둘째, 그러나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이 처한 대외적 환경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외부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기조의 통상정책이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WTO 체제의 더딘 진척과 EU-NAFTA

등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는 자유무역과 지역주의의 양대 기류가 교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무역협정이 EU와 NAFTA라는 2개의 축으로 집적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와중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가지고 급부상하고 있으며, 통화위기 이후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경제는 지역주의화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의 경제개발전략은 유사하며, 동일한 아시아지역 내에 그것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는 대체적으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공통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통상정책은 물론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및 ASEAN 등에 대한 대외통상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 통상정책 고찰의 중요성은 한국경제에서 일본이 갖는 중요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그 지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서, 여전히 제1의 수입국이자 제3의 수출국이며, 제3의 외국인투자국으로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우리의 총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상회하는 만성적인 對日 무역적자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기술경쟁력이라는 본질을 여지없이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를 배경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어 온 양국 간 FTA 체결논의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종료되고, 2003년 12월부터 한·일 FTA 체결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이제 한·일 관계는 커다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¹⁾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지역별로 어떠한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 정책의 본질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수립에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1)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양희(2003a, 2003b) 참고

연구를 통해 일본의 對韓 FTA 전략을 객관화시켜 고찰하는 것은 한·일 FTA협상에 임박하여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통상정책으로, 내용적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엄밀히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외통상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이 FTA에 초점을 둔 양자간 협상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WTO 정책보다는 FTA 정책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현시점까지의 통상정책의 변천과정을 개괄한 후,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역별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주요 지역별 통상정책을 고찰하는 만큼, 그 특성상 정성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적인 연구방법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 통상정책의 기초변화와 전개과정 등에 대해서는 과거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외무성, 대장성(현 재무성) 등의 전·현직관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주요인사, 연구자 등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수집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1장의 3절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과 부가가치를 명확히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통상환경 및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세계 통상환경 변화와 맞물려 전환을 모색하는 일본의 통상정책 기초변화 및 주요내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FTA 정책을 근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주요 지역별로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對구미 지역 통상정책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중 특히 미국은 일본에

게 있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므로, 對美 통상정책은 일본의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전반적으로 對아시아 정책이 ODA 중심에서 FTA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특성을 파악한 후, 특히 중국, ASEAN,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역내국에 대한 양자간 FTA 정책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전개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에서는 전반적인 對중남미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최근 FTA 추진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멕시코와 칠레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FTA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에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전체적인 측면과 對日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우선 일본의 산업통상정책에 대한 개요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본내 대표적 연구로는 일본통상산업성(1986, 1998) 및 통상산업성 산하의 일본통상산업조사회의 보고서가 있다. 小宮(1984), 伊藤(1988), 武村(1997), 隅谷(1998) 등도 산업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 통상정책의 경제학적 존립근거와 일본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주요산업에 있어서의 산업통상정책 등을 분석한 일본 국내의 대표적 연구이다.

Johnson(1982)은 1925~75년간의 통상산업성의 기원과 구조, 역할을 조명하면서 통상산업성이 일본의 고도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계보다는 관료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료우위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Fingleton(1995)

은 그 우위가 官界 내에서도 통상산업성이 아닌 재무성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위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기득권 확보의 선두에 서는 族議員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관료에 대한 정계의 우위론을 주장하는 연구로는 Ramseyer & Rosenbluth(1993), 猪口·岩井(1987), 佐藤·松岐(1986), 村松(1981)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의 통상정책 전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로는 中野 實(1986), 일본통상산업성(1986), Okimoto(1991), 小野 五郎(1993, 2000), 大山 耕輔(1996), 松井 隆幸(1997), 기계진흥협회경제연구소(1998), 정책과학연구소(1999), 종합연구개발기구(2000) 등이 있다. 일본의 관련정책 입안과정에는 정부관료뿐 아니라 민간기업 그리고 업계 단체와 심의회 등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통상산업성에서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했던 내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산업성의 역할과 산업통상정책의 단계별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한 Matsumoto(1991)와 小野(2000)는 통상산업성의 구체적인 정책전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무역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WTO가 2년마다 발간하는 Trade Policy Review는 각국 정부가 제출하는 통상정책에 관한 정부보고서(Report by the Government)와 WTO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사무국보고서(Report by the Secretariat)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일본에 대한 보고서는 일본 통상정책을 체제, 목적, 수단, 부문별로 망라하여 파악하고 있어 일본의 통상정책 이해에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총괄적인 서술에 불과해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지역별 분석은 매우 간략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

일본의 양자간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Tyson (1993)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일 관계이며, 이 또한 주로 미·일 무역마찰을 다루고 있을 뿐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일본의 對美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나성섭(1997)은 미·일 무역마찰을 토대로 일본 통상정책의 기초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對美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 도출에는 적지 않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강태훈(2000)은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일본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는 외교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관심사인 통상정책에 대한 비중 있는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정영록(1996)은 일본의 통상정책을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으나, 일본의 통상정책을 지역별로 망라하면서 對韓 통상정책을 對中 및 對ASEAN 정책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일본의 FTA 전략에 관한 연구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浦田 秀次郎 編(2002a; 2002b),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2002), 宗像直子(2001), 일본경제단체연합회(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FTA 전략을 논한 것으로서, 일본의 FTA 정책에만 국한해 일본 시각을 이해하는 데에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일본의 입장에서 각 지역의 FTA 전략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막상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지역별 FTA 전략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개괄적으로 일본의 지역별 통상정책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정책을 지역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통상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FTA 정책을 기본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對中, 對ASEAN 등 對아시아 통상정책에 주목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일본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제2장 세계 통상환경 및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1.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이것은 지금의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는 무차별 원칙을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무역체제를 선도한 것은 1948년 발족한 GATT 및 1995년 1월에 GATT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이다.²⁾ GATT의 목적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조치 등 무역상의 장벽을 경감하는 것이었다. 초기단계에서의 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그 후 덤핑문제와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포함되면서 자유화의 대상은 비관세조치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급속한 세계화 현상으로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했으며,³⁾ 1995년 1월에는 세계무역을 담당하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WTO가 창설되었다.⁴⁾

2) 2002년 1월 현재 WTO에는 144개국지역이 가입한 상태이며, 세계무역액은 1948년 GATT 발족 당시 580억 달러 규모에서 2001년에는 6조 1,144억 달러를 기록, 반세기 동안에 무려 10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3)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①123개국과 EC(당시) 등 많은 협상국 수, ②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 ③농업분야에서 미국과 EC의 의견조정 부진 등의 영향으로 라운드를 통한 협상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장기화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루과이라운드는 1990년까지 최종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였으나, 7년 6개월이라는 협상기간이 소요되면서 최종적으로 1994년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은 협상대상 분야를 확대시킴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UR에서 규정한 비관세장벽 관련 규범에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가 나타난 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를 더욱 확대시켰다. 일례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과(집행유예) 기간이 주어진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등은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법의 정비 지연 및 국내산업의 보호 등 정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1999년 말까지의 완전 실시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대립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은 농업 및 반덤핑 등에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쉽게 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난항을 겪는 가운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는 WTO 체제하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DDA의 공식적 협상은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시장개방 이슈 이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절차, 무역과 개발 등의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의견차이가 다시 심화되면서, 향후 DDA협상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상태이다. DDA협상에서는 협상방식의 기본 틀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는 협상방식의 수치를 결정하는 세부협상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04년 말까지 DDA협상이 끝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

이와 같이 세계무역을 둘러싼 규범제정은 더욱 복잡해지면서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의 세계화는 급속히 진전되면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혁신은 국경을 초월하여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의 다양성

-
- 4) WTO는 상품의 거래는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협정을 관리·운영함과 동시에 분쟁처리의 무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5) 자세한 내용은 양준석(2003) 및 김준동(2003) 참고

과 신속성을 유발시켰다. 이처럼 국제적인 규범결정에 요구되는 시간과 실제 비즈니스 환경변화의 시간적 괴리현상은 1990년대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온 지역무역협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WTO에 의하면 본래 지역무역협정은 한정된 국가·지역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의미한다.⁶⁾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무엇보다도 UR협상이 난항을 보인데다가 1999년 WTO 시애틀 각료 회의가 결렬되면서 새로운 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WTO에 의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세계 각국은 국제적인 규범제정과 병행하면서 보다 자국에 밀접한 무역관계를 가지는 양자간·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리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지역무역협정의 특징은 거의 모든 협정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FTA라는 점이다. WTO에 통보된 기준으로 보면, 총 172건의 지역무역협정 통보 가운데 FTA로 분류되는 것은 113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⁷⁾ FTA는 관세동맹과 달리 역외각국에 관하

6) WTO에 의하면 지역무역협정은 「관세동맹(Custom Union : C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및 이들을 형성하기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2002년 말 현재, 이미 발효 중에 있는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WTO에 통보된 건수는 총 172건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증가한 지역무역협정의 발효건수를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까지는 총 26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는 91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만 60건을 기록하면서 전체건수의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도 이 증가세는 계속되면서 2000년 15건, 2001년 7건을 기록하고 있다.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english/english/tratop_e/region_e.htm 참고.

7) 각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무차별원칙에 반대되지 않도록,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실질적으로는 RTA 가입국이 WTO 가입국일 경우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임). WTO에서 RTA에 관한 조항은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 등이며, RTA가 서비스무역 분야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WTO에 대한 통보는 GATT 제24조에 의한 것과 GATS 제5조에 의한 것 2건이 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통보 합계 105건 중 FTA로 분류되는 것은 80건이지만, FTA 이외로 통보된 대

여 공통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역내 가입국간의 무역이 협상의 초점이 되며, 관세동맹에 비해 각국간의 조정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FTA에 포함되는 내용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그치지 않고 투자 및 환경, 노동 등 WTO 뉴라운드 협상 의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과는 관계없이 무역·투자 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FTA 중심의 양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동적 자세로 일관해 오던 다자간 통상규범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2.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가. 戰後 연대별 추이

1960년대 일본의 통상정책은 수출진흥과 수입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GATT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 속에서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대 들어 세계각국이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경험하면서 불황에 직면한 것과는 달리,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보호주의 움직임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가 수반되는 건수이므로, 이미 FTA가 발효 또는 FTA와 중복된 통보이다.

을 촉발시킴에 따라 일본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의 다각화와 함께 수입촉진책을 전개하면서 통상마찰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또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까지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무역마찰을 해소하여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도 세계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지역주의 경향은 고조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 문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들 선진국은 관세, 수출자율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문제 등과 같은 기존의 통상마찰 요인보다는 일본의 경제시스템 자체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경제구조 개혁은 물론 보호주의 심화로 야기된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제부분의 구조개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한편으로는 무역마찰 해소와 침체된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그 전부터 추진해야 하는 과제였다고 할 수 있어, 개혁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기존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하여 발생한 급격한 엔고현상은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존에 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통상정책의 결정요인에 해외직접투자과 관련된 제반문제가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1985년 EU의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심화되고 1989년에 미·캐나다 FTA가 체결되는 등 지역주

의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자간 무역체제가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당시 일본은 이러한 지역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비난하면서 지역주의를 통한 형식적인 경제통합보다는 시장주도에 의한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시각은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경제적 수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도 일본의 대외적 통상정책은 여전히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해 왔으며,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WTO를 기본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WTO의 무차별원칙과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근간을 두어 온 일본의 통상정책은 대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일본은 무역과 직접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지역간 경제통합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역외 지역으로 파급되는 플러스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과정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연대·통합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통합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는 重層的 통상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초변화는 2002년 1월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SEPA)」이 체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지역적 틀을 활용하여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경제, 기술 협력을 추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적 통상환경 및 통상정책의 변화

	대내외적 통상환경	주요 통상정책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GATT 가맹 ·(64) OECD 가입, IMF 8조국 이행 ·(64) 케네디라운드 개시(~ 67) ·(65) 최초로 무역흑자 기록 ·(67) ASEAN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대) 경제부흥을 목표로 수출 진흥을 위한 환경정비에 역점 ⇒ 외화할당제도 도입, 수출거래법 제정, 해외무역진흥회 설립 ·(60) 무역·외환 자유화 계획 및 국민소득배증계획 수립 ·(61) 관세율·관세제도 개정 ·(62) 통상백서, ‘국제수지 개선과 무역자유화 요청’ ·(69) 제1차 철강 對美수출자율규제 실시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년대) 무역흑자 기조 정착, 미국과 EC국가간 무역불균형 심화로 시장개방요구 고조. ·(71) 円 변동환율제 시행 ·(72) 마일 섬유관련 협정 조인 ·(73) 동경라운드 개시 ·(73) 제1차 석유파동 ·(76) EC, 對日무역불균형 시정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 통상백서, ‘수입의 적극적 활용과 질서 있는 수출 촉진’ ⇒ 개도국에 대한 GSP 실시, 수입금용 범위확대, 제품수입촉진협회 설립 ·(76) 통상백서, ‘국내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질서 촉구’ ·(79) 통상백서, ‘세계경제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년대) 일본, 무역흑자 지속 ⇒ 주요 선진국, 일본시장의 불공정, 폐쇄성 주장 ⇒ 일본, 무역불균형 개선조치 강구 ·(85) 플라자 합의 ·(86) 우루과이 라운드 개시 ·(89) 미·캐나다 FTA 발효 미·일 구조협회의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81) 마일자동차협약, 對美수출자율 규제 실시 결정(81년 168만 대) ·(83) 일본, 무역흑자 감소와 내수확대 등의 6대 항목 종합경제대책 결정 ·(85) 통상백서, ‘제품수입 확대와 내수중심 성장으로 세계경제에 공헌’ ·(86) 일본, 円高디플레이션 완화 및 내수확대 위한 종합경제대책 결정 ·(87) 통상백서, ‘국제적 협조하에 일본경제 구조조정과 국제적 공헌’

<표 2-1> 계속

	대내외적 통상환경	주요 통상정책
1990년대	·(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 일본의 고비용 구조 개선과 경제구조개혁 추진 ·(92) EC 역내시장 통합 ·(94) NAFTA 발효 ·(95) WTO 발족 ·(97) 아시아 통화위기 발생 ·(99) 유로 단일통화 도입	·(90) 경제심의회, 90년대 통상정책의 비전 제시(기업에서 국민생활 중심) ⇒ 수입촉진정책 강화 ·(95) 통상백서, ‘다양화하는 세계 통상시스템과 아시아경제 부상’ 강조 ·(94년이후) 경제심의회, 규제완화 관련 구조개혁 지속적으로 추진 ·(98) 통상백서, ‘자유로운 통상시스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99) 통상백서, ‘지역 연대·통합은 다자통상체제를 보완’한다고 인정
2000년대	·2002년 말 기준으로 WTO에 통보된 FTA는 172건으로 확대	·(2002)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연대협정(JSEPA) 체결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 Japan,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각 연도 참고.

나.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1) 정책전환을 위한 노력

1990년대 후반 들어 일본의 통상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편승하듯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FTA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FTA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양자간·지역간 협상정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통상정책은 FTA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없었으며, EC 및 미국·캐나다간 FTA 등을 주목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일

본의 자세는 통상백서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1990년도까지 ‘경제통합’, ‘지역협력’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내 일부에서는 이 시기부터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부응하듯이 일본 통상산업성은 1989년 APEC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이 FTA 구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1991년이다. 일본은 통상백서를 통해 ‘경제통합·지역협력과 국제경제체제’라는 주제로 경제통합에 따른 득실의 양면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세계경제·무역을 크게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하였다.⁸⁾ 그 후 일본은 매년 통상백서에 FTA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판적인 논조로 일관하면서 당시 정책입안에서 고려해야 할 하나의 틀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를 일축하였다.⁹⁾

이와 같이 일본의 FTA 추진에 대한 자세는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불공정무역보고서 작성 및 UR의 GATT 제24조 규범강화 등을 제창한 데서도 여실히 나타났으며, 1990년대 들어 일본의 통상정책이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통상정책’ 노선을 걷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FTA 부정론’은 결과적으로 10년도 채 안되어 ‘FTA 긍정론’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시 일본의 자세가 반드시 과거 전통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방향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 전환은 1998년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江戸幕府 시대의 쇄국정책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너진 것과 동일하게, 일본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한국과 멕시코의 對日 FTA 구상 제안이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1998년 7월 통상산업성을 중심으로 구체

8) 일본 경제산업성(1991) 참고

9) 일본 경제산업성(1996) 참고

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돌이켜 보면 일본은 이 시점을 계기로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¹⁰⁾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FTA 구상 자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9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일 경제협력 어젠다 21’ 역시 FTA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양국간 투자촉진, 조세조약, 기준인증, 지적재산권 등 장래 FTA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일본은 1998년 11월 멕시코의 제안으로 양국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였다.¹¹⁾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은 FTA에 관한 시각을 기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전환하면서 과거와 다른 평가를 시도하였다.¹²⁾ 그러나 이미 논의되고 있던 한·일 및 일·멕시코간 FTA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일본의 또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 외무성 또한 이러한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여전히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통상산업성보다 외무성이 FTA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10)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본통상산업성의 의사결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방문에 맞추어 전개되었으며,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이미 당시 오구라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경제인 모임에서 한·일 FTA 구상을 언급한 상태였다.

11) 1998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당시 세디요 멕시코 대통령은 일본 경단련 주최 회의에서 양국간 FTA 체결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으며, 이에 경단련은 1999년 1월에 추진부서를 설치하고 4월 일·멕시코 FTA가 일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1999년 2월 멕시코 商工部와 민간차원의 “경제관계 긴밀화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2) 일본 경제산업성(1998) 참고

보이고 있었다.¹³⁾ 한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이 시기에 발표한 정책제언은 FTA에 대한 기대론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 경제계에 비해 일본정부는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확고한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⁴⁾

2) 정책 전환의 가속화

이와 같이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 한국 및 멕시코와의 FTA 구상은 쉽게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기를 겪었다. 일본무역진흥회가 전개한 일·멕시코간 FTA 연구는 경단련이 3개월 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0년 4월에 이르러서야 발표되었으며, 그 후에도 양국 경제계의 조기 FTA 체결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동일하게 한·일 양국간 FTA에 관한 연구 역시 2000년 5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연구결과가 일본에 있어 다양한 플러스 효과를 유발한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2000년 9월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정부간 협상개시가 아닌 양국의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는 데 머물렀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된 것이 바로 제3의 FTA 구상인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이었다. 싱가포르를 이미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태였기에, 일본이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틈을 타 2000년 12월 일본과의 FTA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 후 일·싱가포르간 FTA 구상은 신속한 협의 및 공동연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빨리 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⁵⁾ 양국간 FTA협상이 조기체결된 데는 양국 정상의 공식적인 FTA 구상 발표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양

13) 일본 외무성(1999) 참고

14) 일본 경제단체연합회(1999) 참고

15) 2001년 3~9월에 전개된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는 새로운 시대의 경제연대협정을 조기 체결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은 2000년 10월, 2001년 중에 본 협상에 들어가 체결을 마무리짓는 데 합의하였다.

국 정부를 포함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곧바로 전개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일본으로서는 한국 및 멕시코와의 FTA 구상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사전의 경험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였다는 지적이다.¹⁶⁾

이와 같이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이 본격화된 2000년 시점에서야 일본은 FTA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그동안 전개해 온 한·일, 일·멕시코, 일·싱가포르 FTA 구상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¹⁷⁾ 그리고 같은 해 일본 외무성도 FTA 부정론에서 긍정론으로 전환했으며, 경단련도 FTA 추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전체가 본격적으로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1년 들어 “WTO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지역 또는 양자간의 포럼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대외경제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은 처음으로 WTO의 불충분성과 중층적인 대외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¹⁸⁾

2002년은 일본의 통상정책에 있어 ‘FTA의 元年’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발효 시킴으로써 FTA 체결국가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는 멕시코와 정부간 본 협상에 들어갔으며, 한국과의 FTA 논의도 2002년 7월부터 본 협상의 전단계 조치로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¹⁹⁾ 또한 일본은 2002년 11월 복수국가간 FTA 형태로 ASEAN과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기로 발표하는 등 일본의 FTA 정책전개는 과거 보여 왔던 지역주의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

16) 일본 경제산업성(구 통상산업성)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

17) 일본 경제산업성(2000) 참고

18) 일본 경제산업성(2001) 참고

19) 한·일 산·관·학 공동연구는 2002년 7월부터 추진되어 2003년 10월 제8차 공동연구회 개최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3년 12월 22일부터 정부간 본 협상에 들어간 상태이다.

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정책변화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으로 일본은 FTA를 통해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물론 상호 자극을 유발시키는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만일 일본이 선행적으로 FTA를 통해 고도의 통상규범을 책정한다면, 다자간 협상에서 동일한 규범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기대한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일본기업으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거점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해당국가와 FTA를 체결한 제3국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전환이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로, 일본은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측면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즉 FTA 상대국의 자본, 인적자원, 기술 및 노하우를 유입하여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일본경제 활성화와 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이들 요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은 고도의 통상규범 책정이 가능한 국가와의 FTA를, 네 번째 요인은 일본의 구조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및 제도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FTA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들 모두가 선진국을 상대국으로 하는 FTA를 상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이에 해당되는 상대국으로는 싱가포르와 한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세계경제의 3대 지역 가운데 2대 지역과의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FTA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은 일본의 통상정책이 FTA를 중심으로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요인은 여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FTA 구상에도 사실상 적용되

20) 일본 경제산업성(2001) 참고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의 정책전환과 FTA 추진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제안 등에 의해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일본 통상정책의 결정 및 전개과정은 여타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3년 12월 현재)

국가 지역	주요 내용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3월부터 양국 경제계 중심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여 의견수렴 실시. 2002년 1월 제2회 합동회의를 통해 FTA의 조기 실현의 필요성 제안. 2월 1일 일본 정부에 제출 - 2002년 3월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발족에 합의. 2002년 7월에 제1회 연구회를 서울에서 개최. 2003년 10월 제8회 공동연구회 개최를 끝으로 연구회 종료. 2003년 12월 22일 정부간 본 협상 개시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관·학 공동연구와 정부간 협상을 걸쳐 2002년 1월 13일 JSEPA 체결, 2002년 5월에 국회 비준을 얻어 2002년 11월 발효 - 관세철폐는 물론 기준인증, 지적재산권 협력 등에 의한 무역원활화,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의 협조, 인적 이동의 원활화 등,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일본의 향후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정 모델로 평가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6월 정상회담에서 FTA 가능성을 포함하는 경제관계 강화 방안 검토, 2001년 9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제7회), 2002년 7월 결과보고서 발표 - 보고서는 ①FTA 조기 체결이 요구되며, ②무역·투자 자유화 및 비즈니스 환경 및 각종 제도의 정비, 양자간 관계 강화 등 폭넓은 내용이 담긴 경제연대협정 체결이 보다 효과적이고, ③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의 신속한 전개를 제안 - NAFTA 회원국 기업·EU 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은 멕시코와의 EPA/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멕시코 평균관세율 약 16%), 정부조달(구미기업에는 입찰 가능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 멕시코기업과 동등한 대우조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일본 산업계는 FTA 체결을 강력하게 요망 - 2003년 10월 농업부문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이로 체결 지연

<표 2-2> 계속

국가 지역	주요 내용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9월 일·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일·ASEAN CEP 전문 가회의’ 설치 합의. 이 회의를 통해 2002년 1월 일본이 제안한 ‘일·ASEAN 포괄적 경제연대구상’ 구체화 작업 전개. 후속조치로서 관계 성정회의를 설치하고 총리관저에 ‘일·ASEAN 포괄적 경제연대구 상을 논의하는 간담회’ 설치 - 20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적극적인 對ASEAN 경제 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 표명
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4월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에 합의, 2002년 7월 일·태국 경제 파트너십협의회에서 작업반 발족. 2002년 9월 제1회 작업반 회의를 개최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연대를 위한 작업반 설치 합 의. 2002년 8월 예비회의에서 작업반 발족. 2002년 10월에 제1회 회 의 개최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0월 APEC 무역장관회의에서 일·대만 FTA 공동연구를 민 간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합의. 2002년 6월 산업계에서 대만과의 FTA 검토회의를 발족하여 양국간 FTA 영향에 대해 검토
ASE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창설 가능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협력 방 향성에 대해 ‘동아시아 Study Group’에서 검토
칠 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2월 칠레의 제안으로 2002년 5월부터 JETRO와 칠레 외무성 간 공동연구시작. 2001년 6월 결과보고. 양국 정부에 양국간 포괄적 인 FTA의 조기체결 제언 - 2002년 5월 양국간 민간단체로 구성된 일·칠레 경제위원회는 양국 간 FTA 조기 체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11월 브라질 개발장관이 양국간 FTA 제안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5월 정상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회 구 축에 합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EFTA, 이스라엘 등도 일본과의 FTA 관심 표명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 참고

제3장 對구미지역 통상정책

1. 對미국 통상정책

가. 개관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는 미·일간의 경제마찰의 불씨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가 축소되고 중국이 급속하게 국제무대에 대두함에 따라, 미·일간의 경제문제는 이전만큼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경제를 對美 무역흑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일본무역진흥회가 실시한 해외시장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서 미국을 선택한 일본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19.4%로서, 중국의 25.3%를 밀돌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한편 종래의 미·일간 경제관계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대폭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내수확대, 시장개방, 규제완화 등을 빈번하게 요구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적자 구조가 변하지 않자, 클린턴 정권시대에 ‘결과주의’를 내세워 對日 무역적자의 삭감을 구체적인 수치목표로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차 클린턴 행정부시대에는 필름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새로운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협의의 장도 설치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사용하는 빈도도 감소하였으며, 일본과의 새로운 통상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WTO에 제소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더 나아가 현재의 미국 부시 행정부는 국제적인 안보 차원에서 일본을 동맹국으로서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부시 행정부는 무

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 스스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1980년대에 격화되었던 무역마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미·일 통상협정을 중심으로 일본의 對美 무역정책을 개관하고, 이어서 1990년대 들어 확대되기 시작한 외국인직접투자를 둘러싼 일본의 ‘외국인 투자 촉진정책’ 및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된 FTA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對美 직접투자·FTA 정책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일본의 對美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1) 무역정책의 변화

일본의 對美 무역정책의 변화내용은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일본은 1970년대 이후로 줄곧 자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서서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對美 무역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일간의 무역마찰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對美 무역마찰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對美 분쟁에 대한 해결방식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기술한 후, 미·일간에 이루어진 주요협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 對美 무역마찰 및 협정

우선 1969년부터 1971년에 걸쳐 전개된 미·일 섬유분쟁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말 닉슨은 섬유수입 규제를 중대한 정치문제로 생각하여 일본을

위시한 섬유수출국과 수입제한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는데, 가장 먼저 일본이 그 표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1969~71년에 걸쳐 모제품 및 화학섬유제품의 對美 수출규제를 둘러싼 미·일 섬유분쟁이 발생하였다.²¹⁾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수출규제안을 일본측이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對美 수출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철강을 둘러싼 미국의 수입규제는 3기에 걸쳐 단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제1기는 1966년 6월부터 1974년 12월까지로,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일본 및 EC에 대하여 對美 수출자율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본의 對美 수출자율규제는 그 후 해제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의 철강수출에 대하여 1975~77년의 3년간에 걸쳐 19개의 덤핑제소가 이루어졌다. 그 후에도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對美 철강수출비율을 제한하기 위해 2국간 수출자율규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중 일본의 할당비율은 5.8%로서 그다지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²²⁾ 이러한 미국의 철강수출 자율규제는 1992년 3월에 철폐되었다.

더욱이 1981년부터 1995년까지는 자동차를 둘러싼 미·일 마찰과 협정이 전개되었다. 1980년에 이르러 일본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세계 제1위(964만 대)를 점유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미국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모두 적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對美 자동차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전미자동차조합과 포드는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의한 미국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일본 자동차회사들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21) 미국의 주장은 상세하게 분류된 모든 섬유제품(품목별)의 수출증가율을 일정한 틀로 묶고(포괄규제), 더 나아가 섬유수출 전체의 증가율을 규제하고자 하는(총량규제) 대단히 엄격한 것이었다.

22) 미국의 철강수출비율 제한 대상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EC, 한국, 스페인, 브라질, 남아프리카, 멕시코, 호주 등이었다. 미국은 이들 대상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비율 합계를 미국 철강수요의 18.5%로 하고, 이를 각국에 할당함으로써 2국간 수출자율규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에 제소했으며, 결국 미·일 자동차협상으로 이어졌다. 이 협상은 2차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VER)와 미국산 부품구입 등에 대한 수치목표 준수를 통해 대응하였다.

미·일 반도체협상(1985~96년)은 반도체산업의 불황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미국업체들이 일본기업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반덤핑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반도체협상은 3차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일본은 제2차 협상까지는 미국이 요구한 수치목표를 수용하는 등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²³⁾ 그러나 제3차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쌍무적 협상에 EU를 끌어들여 다자간 협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신의 통상목표를 달성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미·일 반도체협정은 EU 등을 참가시킨 다자간의 정부회의를 창설함과 아울러 민간기업에 의한 세계반도체회의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에 종결되었다.

이밖에도 1990년대 후반 들어 발생한 미·일 필름 마찰(코닥·후지 분쟁 : 1995~97년)을 들 수 있다. 이 분쟁은 1995년 5월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이 일본 사진필름 및 인화지 시장이 외국기업에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본의 후지필름을 USTR에 제소함으로써 발단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WTO에 제소되었으나, 미국의 판정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문제를 중심으로 미·일 통상문제에 대해 시대구분을 시도해 보면, 대체로 다음 <표 3-1>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주된 특징으로서는 첫째, 일본의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미·일 마찰이 발생한 산업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일 마찰 발생의 원인과 대응이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는 점, 셋째, 시대와 더불어 마찰지역이 확대되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3) 미·일 반도체협정은 1986년에 체결·발효되었으며, 미국은 일본과의 제2차 반도체협상에서,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에 대해 ‘미국 반도체의 일본시장 점유율 20% 보장’을 수치목표로서 제시하였으며, 일본은 이를 허용하였다.

〈표 3-1〉 미·일 통상문제의 시대적 구분

	시 기	문제가 최초로 발생한 산업분야	원인·대응
제 1 기	1950 ~ 60년대	소재산업(섬유, 철강)	집중호우식 수출 ↓ 수출자율규제 + 관리무역화
제 2 기	1970 ~ 80년대 전반	가공조립산업 (컬러TV, 자동차, 공작기계)	집중호우식 수출 ↓ 수출자율규제 + 현지생산화
제 3 기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접근, 수입시장 (반도체, 농산물, 건설, 금융, 상관습 등)	시장개방요구 ↓ 포괄협화의 (접근프로그램 + 구조협약, 포괄협약)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 Japan

나) 對美 분쟁 해결방식의 변화 과정

1995년 WTO가 발족되기 이전의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오직 GATT의 틀 밖에서 불투명한 2국간 교섭에 의해 해결되고 있었다. 즉 GATT에는 제소하지 않고, 또한 GATT의 분쟁해결 절차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2국간 교섭에 의한 미·일 분쟁 해결의 결과, 일본의 對美 수출자율규제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²⁴⁾ 특히 일본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조항)나 슈퍼 301조의 핵심 대상국이었던 관계로, 미국의 위협에 대하여 일본이 양보하는 형태로 줄곧 미·일간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전술한 301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GATT의 적용(수비) 범위가 좁은데다가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계열·유통기구 등의 구조장벽 등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1월 WTO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

24) 일본의 對美 수출자율규제 품목은 섬유, 철강, 공작기계, 승용차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론하고 무역 분쟁을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한 가운데 미·일 통상마찰도 쌍무주의의 틀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2002년 2월 현재 미국은 WTO 발족 이후 70건 가까이(이 중 일본에 대해서는 5건) 제소하고 있어 국별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0건으로서, 이 중 일본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예는 ①301조에 의한 자동차 100% 관세, ②지방정부의 조달절차 문제, ③1916년 반덤핑(Anti Dumping : AD) 조치, ④일본 열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⑤버드 수정조항, ⑥일몰(sunset) 조항 등 6건으로 되어 있다(표 3-2 참고).

전술한 6건 이외에, 2002년 3월 부시 행정부가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일본은 그것이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EU와 마찬가지로 WTO에 제소하였다. 이와 아울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초한 2국간 협의에서 미국정부에 대해 보상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對미국 보복관세를 발동한다는 내용을 WTO에 사전통보하였다.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손해를 입는 수출국에 2국간 협의를 통한 보상조치의 요구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항조치의 발동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여 미·일간의 무역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다만 미국의회의 경우 WTO에 대하여 주권침해의 경계론이 뿌리 깊은데다, 미국의 WTO 패소가 앞으로 계속되면, 쌍무주의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즉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 WTO 패널의 보고에 대하여 문제삼는 사례가 5년간 3회 존재한 경우, 미국의회는 대통령에게 WTO로부터의 탈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3-2> 국별 WTO 분쟁해결 절차 이용실태

피협요청국 협요청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개도국	기타	합계
미 국		20	5	3	23	18	69
E U	23		6	4	24	4	61
일 본	6	0		1	3	0	10
캐나다	6	5	1		3	2	17
개도국	22	19	0	3		3	82
기 타	9	1	0	1	5		24
합 계	66	45	12	12	93	35	263

자료: <그림 3-1>과 동일

다) 미·일간에 개최된 주요협약

1960~70년대의 미·일 무역마찰은 원래 개별품목의 수입증대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미·일간의 전체적인 무역불균형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1981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자, 미·일간의 마찰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발전되었다. 그 결과 미국측은 일본상품의 수입규제로부터 미국상품의 수출확대라는 방향으로 그 대응전략을 수정하였다. 그 최초의 움직임이 고평가된 달러화의 가치를 시정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로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엔고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플라자 합의 직전에 발표한 통상정책의 방향전환으로 나타났다. ‘신통상정책’이라 불리는 이 정책 속에는 1974년 통상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국의 불공정무역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선언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신통상정책 발표 이후 일본에 대해 피혁 및 가죽제품, 외국담배 판매제한의 문제 등을 제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

1985년 1월의 나카소네·레이건 합의에 의해 개시된 ‘특정시장 및 분야별 협의’도 미국의 일본시장 진출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미국은 對日 경쟁력이 있는 전자, 전기통신, 의료기기, 임산물, 수송기계를 대상으로 일본시장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1989년 9월부터 시작된 ‘미·일 구조협약’로서, 이 협의에서는 일본의 내수확대에 의한 수입증대, 계열기업간 거래관행 등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의제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행해진 다각적 노력으로 인해 일본의 제도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일간의 무역불균형 자체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새로운 협상의 틀로서 ‘미·일 포괄경제협약’을 제안하였다. 이는 예컨대 일본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객관기준으로서 수입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이 목표치를 일본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對日 보복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무역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기업들에 수입목표를 정해주는 것은 관리무역에 속한다고 하여 반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01년 6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미·일 경제성장 파트너십’의 발표를 통하여, 양국의 건전한 거시정책 운용,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해외직접투자 및 시장 개방 등의 부문에서의 적극적 협조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1997년의 ‘미·일 신 경제 파트너십 협의’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서, 산하에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를 설치하여 경쟁정책의 실시뿐만 아니라 통신, 정보기술, 의료기기, 제약,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각료간의 정기적 회의는 물론 양국 민간부문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점과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전술한 제반협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일 통상관계는 1995년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 빈발했던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는 전부 폐지되었고, 그 동안 GATT 체제의 밖에 존치되었던 다자간 섬유협정도 조만간에 WTO 체제로 흡수될 예정이다. 또한 과거 미국의 압력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일본은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의 부당성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등 예전에 없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2) 직접투자정책의 변화

이하에서 설명하는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본래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로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나 EU 국가들을 의식하여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으로 바뀌어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²⁵⁾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87년부터 1988년까지 확대국면을 유지하였으나, 1989년 들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⁶⁾ 1990년대 들어서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감세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는데, 특히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요인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확대국면을 재현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

25)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외환법에 의해 허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바뀌고, 그 후 1992년 1월부터 사전신고제에서 원칙사후신고·일부사전신고제로 이행함에 따라, 그 자유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26)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요인은 소비시장으로서의 기대감, 성장시장인 아시아에의 진출거점으로서의 적지성, 기술력 및 인적자원 활용의 편의성 등의 면에서 일본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며, 감소요인으로는 1989년 들어 전개되는 엔고 및 자산인플레이에 의한 투자비용 상승, 호경기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무실 임대료의 급등 등에 기인하고 있다.

진국 수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서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은 미·일간의 해외투자 불균형을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표 3-3, 표 3-4 참고). 즉 미국은 1989년 무렵부터 일본의 직접투자 불균형을 문제시하기 시작하여, 일본에 대해 직접투자 확대 요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 등 구미국가들의 요구와 국내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점차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표 3-3>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low)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① 해외직접투자	51,392	48,021	53,977	40,941	66,975	48,728	31,905	36,239
② 외국인직접투자	3,833	6,841	5,527	10,470	21,510	28,276	17,405	17,935
③ 비율(②/①)	13.4	7.0	9.8	3.9	3.1	1.7	1.8	2.0

자료: 일본 재무성 『對外·對內 直接投資 狀況』

<표 3-4> 일본의 對美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① 對美 ODI	22,650	22,005	20,769	10,340	22,311	12,168	6,401	8,132
② 미국으로부터 FDI	1,837	2,122	1,237	6,310	2,230	9,141	5,139	4,876
③ 수지(①-②)	20,813	19,883	19,532	4,030	20,081	3,027	1,262	3,256
④ ①/對세계ODI	44.1	45.8	38.5	25.3	33.3	25.0	20.1	22.4
⑤ ②/세계로부터의 FDI	47.9	31.0	22.4	60.3	10.4	32.3	29.5	27.2

주: ODI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FDI는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

자료: 일본무역진흥회(2003),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사실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직접투자불균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극히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였다. 즉 그 당시 일본은 국제적인 마찰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여, 외국기업의 對日 투자를 일본경제의 발전이나 지역경제의 진흥에 결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들어 일본 국내에서도 국내산업의 혁신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겨냥하여 외국기업의 對日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기운이 고조되었다. 예컨대 1990년에는 일본정부가 ‘직접투자의 개방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1992년에는 ‘수입촉진·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일련의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절차 면에서 가일층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 지원·서비스(Foreign Investment in Japan Development Corporation: FIND)’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외국기업의 對日 투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착수했고, 또한 1994년에는 총리 및 각료들로 구성된 ‘對日 투자회의’가 발족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함과 아울러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에의 움직임은 일본 국내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은 자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그것이 너무 적다는 외국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부터 일보 전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그 자체가 일본경제나 지역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표 3-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어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3-3 참고).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5년에는 18억 3,7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91억 4,100만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고).

〈표 3-5〉 일본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

실시연도	실시내용
1980	- ‘개정외환법’을 시행(외자도입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984	- 일본개발은행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용자제도, 일본무역진흥회에 의한 투자관련 정보 제공사업 등을 개시
1986	- ‘마에카와(前川) 레포트’를 발표, ‘民活法’을 시행
1987	- ‘新 마에카와 레포트’를 발표
1990	- 일본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호의적으로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
1991	- 외환법 개정을 통한 투자절차의 간소화를 도모
1992	- ‘수입촉진·외국인투자법’을 제정
1993	-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서비스’기구를 설립
1994	- ‘對日 투자회의’를 발족
1995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하여’ 라는 성명을 발표
1996	- ‘M&A에 관한 외국인직접투자회의’ 성명을 발표
1999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7가지 제안’을 발표
2002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민간포럼’에서 총리에게 외국인직접투자 촉진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
2003	- ‘對日 투자회의’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발표, ‘외국인직접투자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

자료: 일본무역진흥회, 『ジェトロ白書·投資編』, 각 연도.

3) 마일간 FTA 논의 전개

가) 마일 FTA 구상

마일 양국간 FTA 구상은 1988년 1월에 체결된 미-캐나다 FTA를 계기로 대두되었다.²⁷⁾ 그리고 이 구상이 미국에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27) 마일 FTA 구상은 맨스필드 주일 미국대사가 그 이전부터 줄곧 제창해 온 것으로,

우선 미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GATT 체제에 있어 그 산파역을 담당했고, 또한 ‘차별 없는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다자적 무역체제의 추진자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1993년 이후 미국은 GATT 차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자간 자유화, 즉 차별적 자유화의 접근방법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통상전략의 최초의 변화는 1983년에 제정된 ‘카리브해 국가 경제부흥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은 카리브해의 각국 및 그 지역에 대하여 미국이 일방적 특혜무역 및 세제조치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이지만, 이는 이전까지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해 온 GATT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차별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변화로서 인식되었다.

한편 세계의 2대 경제대국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사상유례 없는 규모인 만큼 미·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1988년 9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는 미·일 FTA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여기에서 이 위원회는 미·일 FTA가 체결될 경우 발생할 미국의 이익과 불이익을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이익으로, ① 분쟁처리 메커니즘이 설치된 경우에 미·일간의 정치적 분위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② 일본의 독점금지법, 산업정책 및 금융규제의 완화 등 미국 무역정책에 있어서의 목표달성이 용이하며, ③ 장벽철폐에 따른 무역창출효과 기대와 함께, ④ GATT 교섭이 실패한 경우 그것이 차선책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 미국의 불이익으로는, ① 협정을 체결해도 그것이 잘 기능하지 않을 경우, 미·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② 협정 체결 후에도 일본의 농업, 유통 등에 대한 시장접근이 어렵고, ③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④ EC(현재의 EU), 아시아 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국가

그 당시 베이커 재무장관, 베리티 상무장관이 이 제안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들과의 관계악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미·일간의 무역관계에 있어 생각될 수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이 지적되어 있어 그 후의 논의에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미·일 FTA 기대효과

한편 이러한 역사를 갖는 미·일 FTA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그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미·일 FTA의 기대효과 및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일 FTA에 관한 검토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으나, 일본 경제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2000년 여름에 개최된 미·일 재계회의에서 일본측이 FTA를 제창한 것에 더하여 경단련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음에서는 일본측과 미국측의 FTA 구상을 중심으로 그 기대효과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경제계는 미·일 FTA의 기대효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포괄적인 FTA가 발효되면 미·일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그것은 양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일 FTA는 세계 무역자유화의 촉진에 크게 공헌할 것이며, 미·일 FTA협정에 포함된 규범이 세계의 규범을 규정해 가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구조개혁이 추진됨과 아울러 불필요한 경제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FTA의 교섭과정에서 상호이해가 진척되면, 쓸데없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일본이 아시아지역에서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의 자유무역 추진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과거 ‘요새와 같은 유럽’을 염려한 바와 같이 일본의 움직임이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 블록화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 FTA에 의해 정치적·안보적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오키나와 같은 물리적인 군사기지 대신 FTA가 마일간의 유대를 심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미·일 FTA에 대한 미국측의 논의현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뚜렷이 가시화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미국측을 대표할 수 있는 FTA 구상 하나를 든다면, 바로 ‘오픈 마켓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이 보고서는 우선 2010년을 목표로 ‘미·일 오픈 마켓 플레이스’의 형성을 제창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픈 마켓 플레이스란 ‘관세를 없애고 규제에 의한 장벽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행할 수 있는 시장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경제연대협정이면서 시장통합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일 오픈 마켓 플레이스의 실현은 양국 경제에 있어 플러스 효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미국에 있어서는 자유화에 주력하는 확고한 자세를 세계에 재인식시키는 기회로 되는 한편, 일본에 있어서는 구조개혁, 규제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게 되어 세계의 투자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 향후 전망

일본 내에서는 만일 양국간 FTA협상이 전개될 경우, 상품의 관세철폐를

28) 미국의 오픈 마켓 구상은 2000년 7월에 발표된 미국의 외교문제평의회 주임연구원 블루스 스톱스의 ‘A New Beginning : Recasting the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이라는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오픈 마켓 플레이스의 적용대상 분야로서는 회계기준, 유통, 경쟁정책, 세제, 투자, 정부조달, 전문가인증제도, 기술표준 등의 분야가 제기되고 있다.

제외한 형태로 포괄적인 경제연대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곧 교섭상 난항이 예상되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관세철폐보다는 서비스무역, 투자, 기준인증,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를 도모함으로써, 상호 경제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미국측 수출산업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농수산물 분야를 제외하고 협상을 전개한다는 것이므로, 미국측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며, 이를 반영하듯 오히려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WTO 뉴라운드의 출범과 같은 글로벌한 과제에 더하여, 미·일 각각의 지역적 통합노력과 아시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 및 양자간 경제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투자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규제 및 구조개혁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개별적 마찰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었던 지금까지의 미·일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과제나 쌍방의 경제정책의 운영에 관하여 긴밀하게 의견교환 및 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정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대화를 강화해가기 위한 새로운 미·일 관계의 틀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한편 미·일간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소멸된 상태에 있지만, 철강문제는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로서는 전술한 철강 이외에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유리 등의 문제에서 미국과의 의견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컨대 ‘미·일 민관 합동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민간기업이 서로의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규제완화 및 투자에 관한

미·일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의 규제완화 요망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투자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일 양국의 투자동향 및 투자환경, 제3국과의 투자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의견 교환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對EU 통상정책

가. 개관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EEC(유럽경제공동체)가 탄생했을 때만 해도, 통합유럽은 대국으로서의 실력도, 또한 대국을 향한 의지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국제적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가 눈에 띠게 진척되었다. 예컨대 시장통합의 실현(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의한 EC에서 EU로의 승격(1993년), 15개국 EU로의 확대, 단일통화 유로의 탄생(1999년) 등이 발빠르게 진행되었다.²⁹⁾ 더욱이 21세기에 접어들어 EU는 동구로 그 세력을 확대하여, 과거의 ‘무력한 유럽’에서 ‘확실한 대국 유럽’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유럽의 대국화’는 구미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본의 시각은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WTO의 ‘도하개발 어젠더’가 개시된 이후, 일본은 미국 등과의 통상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반덤핑규제, 농업의 다기능성(비교역성), 지적재산권, 유전자변형 등을 둘러싸고 유럽과의 공동작전이 필

29) 여기에서 EU는 EC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점에 따라서는 EC를 의미한다. EC는 1968년 EEC의 관세동맹이 완결됨에 따라 EEC가 확대·개편된 경제공동체로서, 이는 1991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또다시 EU로 개칭되었다.

요 불가결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일본은 전술한 ‘유럽의 대국화’를 무시해서는 결코 유효한 대외통상전략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를 위시한 일본과 EU의 경제적 관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1993년부터 199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의 對EU 수출입 규모는 증가했지만, 일본의 무역은 주로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것이 많았고 EU의 무역은 주로 역내 국가와 미국에 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 면에서 본 일본과 EU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對美 무역정책 부문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 입각하여, EC 발족 이후 발생한 일·EC간의 무역마찰을 바탕으로 행해져 온 일본의 對EU 무역정책을 개관하고, 이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둘러싼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및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FTA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對EU 직접투자·FTA 정책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일본의 對EU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1) 무역정책의 변화

가) 對EU 무역마찰 및 조치

1980년대 전반의 대립된 일·EC 경제관계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는 1982년 10월 프랑스정부에 의한 對日 VTR 제품의 수입제한 조치였다. 당시 프랑스정부는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VTR 제품에 관한 통관수속을 일원화하고, 통상관련 문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일본 VTR 제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일·EC 간의 무역불균형이 점점 확대되는 것에 대한 유럽의 초조

감이 극도로 고조된 사실이 내재해 있다. 그 후에도 EC측은 무역불균형 해소 등의 對日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EC의 對日 요청에 대하여 일본은 대략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해 왔다. 우선 일본은 對EC 무역의 확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1981년 12월 이후 7차에 걸쳐 시장개방 대책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1985년 7월에는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이라는 입장에서, 시장접근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1991년 하반기 이후 버블경제가 점차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對EU(EC) 무역흑자는 크게 축소되었다(표 3-6 참고). 그리고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이 진전된 것과 발맞추어 수출주도형으로부터 내수주도형으로의 전환은 일·EC의 관계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 1월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은 일·EC 관계를 긴밀하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미국과 일본간에 전개되고 있는 ‘미·일 구조협약’의 성과를 EC 등에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의 對日 요청은 새로운 일·EC 관계 구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마침내 1991년 7월 일·EC간에 이루어진 ‘일본과 EC 및 그 가맹국과의 관계에 관한 헤이그 공동선언’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이 선언은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인권의 존중, 시장원리, 자유무역의 촉진 등을 강조하고, 쌍방이 공히 관심을 지닌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94년 7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최초로 포괄적인 ‘對아시아 전략 문서’를 각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5년 3월 이 위원회는 ‘유럽과 일본, 다음 단계’라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일본과의 경제문제에 관한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화의 심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시기

를 같이 하여 1995년 3월에는 일본정부가 ‘3개년(1995~97년)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일·EU간 규제완화를 위한 대화가 개시되었다. 그 후 EU 집행위원회는 1997년과 1999년의 2차에 걸쳐 ‘규제완화 제안리스트’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도 1998년 11월 ‘對 EU 요망리스트’를 제출하고, 1999년 11월에는 21분야 62항목에 걸친 ‘개정 리스트’를, 그리고 2002년 2월에는 21분야 89항목에 걸친 ‘재개정리스트’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1995년 5월에는 일·EU간에 상호인정 협력에 관한 협정이 개시되었지만, 1999년 6월에야 협정내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일·EC 상호인정협정은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상호승인에 관한 쌍무협정으로서, 전기통신기기, 전기용품, 화학제품, 의약품이 그 대상분야로 되어 있다.

<표 3-6> 일본의 對EC(EU)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① 수출	62,474	56,412	57,480	70,291	63,166	65,820	71,152	74,281	78,486	64,674	61,115
② 수입	31,280	30,149	35,479	48,812	49,521	45,199	38,895	42,634	46,959	44,804	43,736
③ 收支(①-②)	31,194	26,263	22,001	21,479	13,645	20,621	32,257	31,647	31,527	19,870	17,379
④ ①/對세계수출	18.4	15.6	14.5	15.9	15.3	15.6	18.4	17.8	16.3	16.0	14.7
⑤ ②/對세계수입	13.4	12.5	12.9	14.5	14.1	13.3	13.9	13.8	12.3	12.8	13.0

자료: 일본무역진흥회(2003),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나) 對日 차별 수입제한 문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차대전 이후 일·EU(EC) 통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유럽측의 對日 차별 수입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일본이 GATT에 가입할 때 對日 경계심이 지극히 강했던 유럽의 10개국³⁰⁾은 GATT 회원국에 부여하는 최혜국대우(MFN)를 일본에 적용하

는 것을 거부하고, 對日 차별 수입제한을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191개 품목에 대하여 對日 수량규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일·EC간에 제1차 역협정 체결교섭이 행해진 1970년 9월 이후 1970년 11월과 1971년 7월 걸쳐, 일본은 EC의 對日 차별조치의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EC측과 질긴 교섭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특히 ‘對日 공동 세이프가드’³¹⁾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함으로써, 교섭은 타결되지 않은 채로 EU 회원국과의 쌍무협정이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對日 차별 수입제한 품목 수를 보면, 1970년대에 EC 9개국에 걸쳐 191개 품목에 달했던 것이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1988년 말에도 EC 12개국의 131개 품목이 이에 해당될 정도였다.

그러나 1992년 말의 완성을 겨냥한 EC 역내시장 통합계획은 이 對日 차별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EC측에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5년 6월에 발간된 EC 집행위원회의 ‘역내 시장백서’는 국별 수입규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정부도 EC가 對日 차별 수입규제 조치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EC 시장통합 개방성의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88년 9월 이후 3차에 걸친 對日 수입수량 제한 철폐를 위한 일·EC 정부간의 비공식협회가 개최되고, 131개 품목 중 69개 품목을 철폐할 것을 표명한 결과, 남은 것은 62개 품목으로 되었다. 12개국 중 對日 차별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5개국이었다. 또한 1991년 3월 프랑스 등이 일부 수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품목은 51품목으로 되었고, 1993년 3월에는 23개 품목으로까지 축소되었다.

한편 최대의 난관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일본 차의 수입자유화 문제에 있어서는, 1991년 7월 프랑스(신차 등록대수의 3%), 이탈리아(직접수입 총량 4,500대), 스페인(동 1,200대), 포르투갈(동 2만 대)의 일본 차 수입제한

30) 영국과 아일랜드는 제외되었다.

31)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에만 적용되었던 세이프가드 조항을 EC 회원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EC측의 요구사항이다.

을 철폐하기로 일·EU간에 합의되었다. 또한 양측은 1993년 이후 1999년 말까지 EU에 대한 일본 차의 수출을 감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2000년 1월부터는 일본 차의 對EU 수출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³²⁾

다) 對EU 무역정책의 추이

일본은 1960년대부터 GATT를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용하여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두 차례의 석유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시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일본과 미국·EU를 중심으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개방 요구 등의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들어서 EU의 對日 무역적자가 또다시 확대됨에 따라, EU측은 자동차, 공작기계, 전기기계 등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특정한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를 3년간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EU는 관세장벽보다는 반덤핑제도,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의 적용, 수입수량조치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 왔으며, 이들 가운데 EU의 對日 통상정책 수단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덤핑제도였다.

특히 1980년대 EU(EC)는 수출자율규제 대상 외의 일본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복사기, D램 반도체 등 높은 경쟁력을 지닌 일본제품 등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EU 회원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자, 일본은 EU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율규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 EC에 이은 EU의 확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일본의 對EU 통상·경제관계도 더욱 강화·발전되는 계기를 맞

32) EU 각국의 對日 차별 수입수량 제한은 최종적으로 1994년 3월에 완전 철폐되었다.

이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7월에는 일·EC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일·EC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992년에 일·EC 자동차합의도 체결되었다. 특히 일·EC 공동선언은 일본과 EC가 서로 동등한 파트너임을 확인하면서, 포괄적인 경제관계의 강화를 모색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즉 그 이전까지의 일·EC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경제 면의 개별사항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일·EC 공동선언을 계기로 정치·경제·환경·과학기술·ODA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EC 관계는 무역·투자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6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와 EU 국가간의 회합의 무대인 ASEM이 처음으로 개최되어, 일·EU의 관계를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통상·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1999년에 유럽의 단일통화인 유로가 탄생하고 2000년에 들어서 EU 회원국들의 통합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일·EU간에는 ‘밀레니엄 파트너십’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더 나아가 2000년 7월 도쿄에서 개최된 일·EU간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200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을 ‘일·EU 협력을 위한 10년’으로 규정짓고, 상호간 경제·무역관계의 확대, ASEM 등 국제협약에서의 양측간 협력강화, 국제정세에 대한 상호협약 등을 도모기로 합의하였다.

2) 직접투자정책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일본과 EU의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모두 매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對세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對EU 직접투자 및 EU의 對日 직접투자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EU의 對日 직접투자는 경향적으로 보아 북미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만, 절대금액 면에서 볼 때 일본의 對EU 직접투자 규모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U의 對日 직접투자는 최근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추세적으로 볼 때 1999년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나, 여전히 양측간에는 미·일간과 마찬가지로 투자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EU 등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對美 직접투자정책과 유사한 여러 유인제도를 마련하여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3-7> 일본의 對EU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① 對EU ODI	8,239	7,149	10,963	13,931	25,320	23,919	10,235	14,655
② EU로부터의 FDI	1,200	1,698	2,324	2,035	12,327	4,267	8,530	5,256
③ 收支(①-②)	7,039	5,451	8,639	11,896	12,993	19,652	1,705	9,399
④ ①/對세계ODI	16.0	14.9	20.3	34.0	37.8	49.1	32.1	40.4
⑤ ②/세계로부터의 FDI	31.3	24.8	42.0	19.4	57.3	15.1	49.0	29.3

주: ODI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FDI는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함.

자료: 일본무역진흥회(2003),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3) 일·EU FTA 구상논의

전세계적으로 FTA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 동아시아에서도 여러 형태의 FTA 구상이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특히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멕시코, 칠레 등과의 양자간 FTA뿐만 아니라 ASEAN 및

ASEAN+3 등 복수국가간 FTA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2002년 5월 호주, 뉴질랜드 방문을 통해 일본과 이들 국가간에 FTA의 체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아직까지는 전술한 미국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EU와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다만 ASEM 등을 통해 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EU측에서도 동쪽으로의 세력확장을 위해 가입 후보국들(12개국)과 교섭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단지 칠레, 안테스공동체, MERCOSUR(남미지역공동시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과 FTA 체결을 위해 교섭중에 있다. 또한 싱가포르가 제안한 FTA 체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³³⁾ 이와 같이 일본이 EU의 FTA 체결상대로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EU의 對아시아 전략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EU에 있어서 아시아와의 관계는, 지역적 안정이나 미국에 대한 대응적 균형도모라는 동기가 약하고, 지리적으로 먼 이유도 있어, 서로 FTA를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아시아 각국, 특히 동아시아는 199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경제의 성장 센터로서 유럽의 높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예컨대 1994년 12월 독일의 에센에서 개최된 EU 각료이사회에서는 세계경제 성장의 핵으로 되고 있는 아시아를 중시하도록 제안한 ‘신 아시아전략을 향하여’라는 제하의 지침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1년 후인 1995년 12월에 EU 15개국, EU 집행위원회, ASEAN 7개국, 한국,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ASEM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 첫번째 회의인 제1차 정상회의가 1996년 3월 방콕에서 개최됨에 따라, ASEM은 아시아와 EU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비공식적인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제1차 정상회의 개최는 과거의 중주

33)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7개국과 싱가포르간 FTA는 이미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상태이다.

국·식민지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ASEM 탄생의 배경에는 EU 산업의 부진에 더하여 세계의 성장 센터인 아시아시장에서 더 이상 뒤쳐지면 안 된다는 EU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내재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는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재확인의 모임’이 되었고, 여기에서 ‘아시아·유럽 협력구상 2000(AECF 2000)’이 채택되었다.³⁴⁾ 2001년 9월에는 1994년의 ‘對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한 후 확대된 EU와 아시아간의 관계강화를 겨냥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 기본 틀’을 채택하였다.³⁵⁾

더욱이 2002년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에서는 EU·아시아 지역간의 경제협력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한편, 양 지역간의 진일보한 경제통합은 DDA협상이 성공리에 종료한 후의 단계라고 정의함으로써 WTO에의 진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한편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양 지역의 무역, 투자, 금융 등 3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EU·아시아 각각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이 설치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EU·아시아간의 유일한 지역적 협력구조인 ASEM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그것이 비공식적인 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등한 파트너로서 양 지역간의 교류를 촉진한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 등 자유무역 촉진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역할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일본으로서도 일·EU간 FTA 구상보다는 포괄적인 對EU 경제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AECF 2000에서는 향후 10년의 ASEM 프로세스의 비전, 원칙, 목적, 우선적 사항, 구조 등이 설정되었다.

35)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 기본 틀’ 구상에는 EU와 아시아간의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빈곤축소, 민주주의의 발전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향후 전망

일본과 EU간에는 일·EU 정상회담, 일·EU 각료회의, 일·EU 고위관 계자 협의 등과 같은 회의가 통상문제를 위시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1997년부터 10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Gateway to Japan II’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일본측에서도 일본무역진흥회 등을 통하여 이 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1993년 이후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EU 집행위원회는 산업정책·산업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의를 위해 ‘일·EU 산업정책·산업협력 다이얼로그’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일·EU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에 ‘일·EU 산업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연수,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일·EU 산업계의 의견교환을 위해 기존의 민간업계 대화를 강화하고, 1999년에 설립한 ‘일·EU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라운드테이블’을 토대로 EU와의 대화기회를 가일층 확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일본과 EU간에 무역 측면이나 FTA 측면에서 이렇다 할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은 서로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방면에 걸쳐 대화의 채널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은 비록 EU와의 무역비중이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과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양측의 철강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조치나 WTO에서 다뤄질 분쟁문제 및 뉴라운드문제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상대로서 EU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M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술한 회의들과 유사한 여러 회합을 통해 EU와의 긴밀한 접촉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SEM과 WTO를 통한 EU와의 상호 협력문제는 일본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

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일본과 EU는 모두 뉴라운드에서의 교섭을 중시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취하는 것은 이전의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일본이 쌀개방 문제 때문에 처신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산업계가 매우 중요시하는 반덤핑의 규율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EU가 그 교섭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수입제한이나 수출자율규제가 허용되지 않는 WTO에 있어서도 실사가능한 통상조치인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자의적·보호주의적 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EU에 협력은 하지만 과거 EU가 부품에 대한 반덤핑 규칙을 도입한 후 반덤핑 규칙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현재에도 반덤핑 규칙의 자의적 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한다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 對아시아지역 통상정책

1. 개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일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불과 1.3% 수준이었다. 이 시기 동아시아가 통화위기로 인해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6.7%의 고성장을 시현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³⁶⁾ 또한 세계무역에서 일본의 수출비중 역시 1990년 8.6%에서 2000년 7.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2년도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49개국·지역 가운데 30위(2001년에는 26위)를 기록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은 세계적인 IT(정보기술)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IT 관련제품의 세계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IT화의 최첨단에 있었던 미국의 왕성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장기불황에 허덕이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화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의 약 10여 년 간에 걸쳐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통화위기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급속한 경기회복을 시현하였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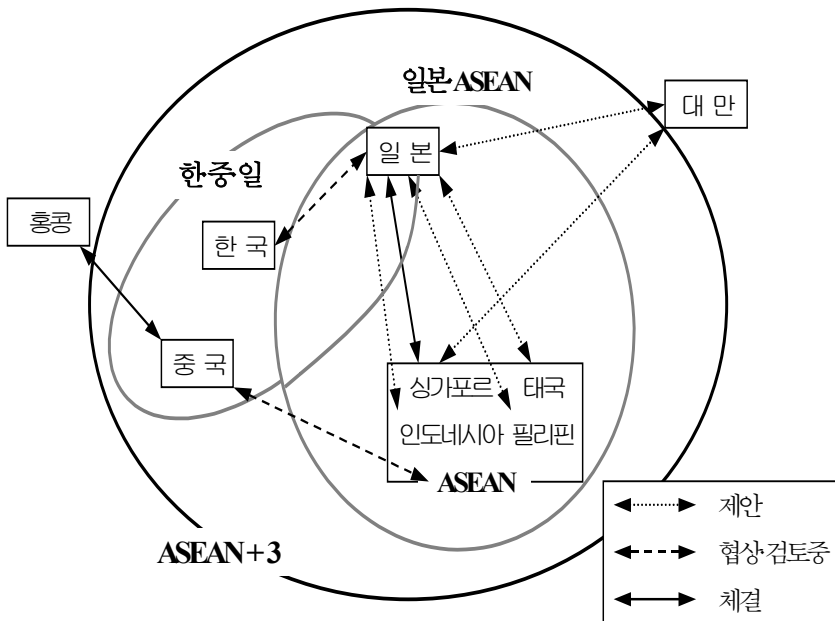
이러한 일본의 위상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對아시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에 충분했으며, WTO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병행하여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연대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일본은 무역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기술, ODA, 서비스무역 등에서 對아시아 중시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36)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참고.

37) 青木健(2002) 참고

통상정책 추진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FTA 체결 전개이다(그림 4-1 참고). 이는 곧 일본이 FTA 체결을 바탕으로 일본기업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무역 및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과 이익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으로서는 FTA를 통해 국내적으로 무역 및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각종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림 4-1> 일본의 對아시아 중시정책 추진에 대한 개념도



자료: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이와 같이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대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전반은 APEC 창설에 의해 역내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완만한 협력’ 시대였다고 할 수 있으며, 후반에 들어서는 양자간 FTA와 같은 ‘제도화’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전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전반은 동아시아 역내 변화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현저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ASEAN+3’에 의한 지역협력 등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점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지역의 변화는 세계 각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FTA와 아시아 통화경제위기, 중국경제의 부상,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등 동아시아 역내외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하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간 FTA 추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정책을 중국, ASEAN, 한국 등 주요 지역·국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작금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對아시아 통상정책은 대부분이 ODA 등을 통한 기술협력과 자금지원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FTA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38) 1999년 이후 FTA의 공백지역으로 일컬어져 온 동아시아지역에도 FTA의 움직임이 급속히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뉴질랜드와 일본과는 각각 2001년, 2002년에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는 FTA 체결에 서명(2002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역시 인근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과 지역을 초월한 FTA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2010년 이내에 ASEAN과 FTA를 체결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이다. 상세한 내용은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english/english/tratop_e/region_e/regione.htm 참고.

2. 對중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1) 무역정책의 변화

2002년 세계적인 IT 산업의 침체와 미국의 테러 사건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對세계 무역은 WTO 가입을 계기로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수출은 전년대비 21.8% 증가한 3,256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2.3% 증가한 2,952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동 34.6% 확대된 304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면서 당초 예상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對中 수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설비기계와 외국기업 및 중국의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완제품 위주의 내구소비재(가전, 자동차 등)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94년 들어 중국이 외국으로부터의 완제품 수입에 부여해 온 면세조치를 폐지하고 자국내 생산 증가를 도모함에 따라, 1996년을 정점으로 일본의 對中 완제품 수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對中 수출품목을 공업용 원재료, 부품 및 중간재로 대체하면서, 지속적으로 對中 수출을 확대해 나갔다.³⁹⁾ 한편 일본의 對中 수입 역시 1996년부터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품 중심의 일반 소비재에서 기계류를 비롯한 중간재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표 4-1 참고).

현재의 중국은 대외무역구조의 고도화와 산업 발전을 토대로 과거 소비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세계의 상품생산과 수출거점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듯 일본의 對中 무역 패턴도 ‘공업용 투입재(부품, 중간재)의 對中

39) 1994년 중국의 수입품 면세조치 폐지와 자국내 생산 증가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자동차, 사무용기기 등 對中 수출은 199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물론 이 시기를 정점으로 중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된 데 따른 요인도 부정할 수 없다.

수출', '제품의 對中 수입'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최근 일본의 對中 수출은 중국의 생산품목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범용품의 첨단화의 추진에 힘입어, 기계관련 부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對中 수입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996년 이후 일·중 무역은 일본이 공업용부품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조립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간 국제적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이어 대만의 WTO 가입은, 일본의 對中 무역이 단순히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중화경제권을 포함하는 다자간 무역구도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촉진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對中 무역은 중국내 일본기업 및 중국, 대만 기업에 부품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중국 및 대만 기업의 對세계 수출 확대를 통한 부메랑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략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는 2004년 1월 1일 발효되는 중국·홍콩간 「경제·무역긴밀화협정(CEPA)」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지속적인 경제관계 강화를 견지한다는 입장이다.⁴⁰⁾

40) 중국·홍콩간 「경제·무역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은 2003년 6월 29일 체결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준FTA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제1단계로서, 전기제품, 섬유, 정밀기계 등 273항목의 관세가 철폐된 후 궁극적으로 2,000항목의 추가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협정에 힘입어 중국과 홍콩간 무역원활화, 금융, 부동산 등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투자처로서의 홍콩의 매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시아경제는 물론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일본의 對中 무역패턴 및 구조변화

	1990년대 중반 이전	1990년대 중반 이후
對中 수출	○자동차, 가전, 사무용기기 등 완성품 중심 ○내구소비재 중심	○공업용원재료, 부품, 중간재 등 다양화 ○내구소비재, 산업용 부품류 등 고도화
	(주요 품목) ○음향영상기기 및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완성품	(주요 품목) ○합성섬유직물, 유기화합물/플라스틱, 음향영상기기, 사무용기기 및 통신기기의 부품·반제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비철금속부품 등
對中 수입	○저부가가치 제품 중심 ○일반 소비재 중심	○고부가가치 제품 ○내구소비재, 산업용기기
	(주요 품목) ○1차 산품, 섬유제품, 가구·목제품	(주요 품목) ○음향영상기기, 통신기기(개인용단말기 등), 컴퓨터 및 동 부속품·주변기기, 사무용기기, 과학광학기기, 가구·목제품 등

자료: 일본 재무성, 통관통계를 참고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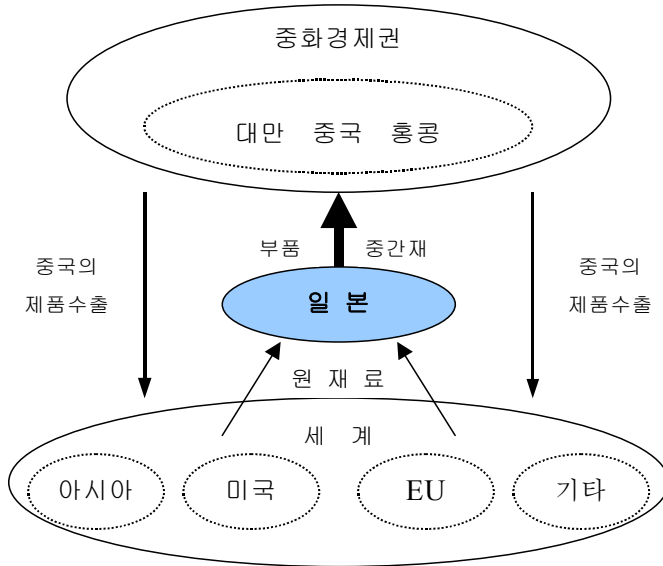
특히 일본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둘러싸고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라는 측면을 저울질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논쟁은 일·중 보완관계 유지 및 이를 통한 對中 수출 확대효과가 강조되면서 점차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관점은 중국의 WTO 가입은 관세인하 및 중국 경제·산업의 단계적 고도화를 촉진시켜, 앞으로 당분간은 IT 품목 및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는 물론 원재료, 부품 및 중간재 등의 對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본의 안이한 판단에 경종을 울리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⁴¹⁾ 즉 장기적으로 중국은 WTO 가입에 힘입어 ①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물가 및 생산비용 하락, ② 국내산업은 물론 수출기업의 생산력, 제품·기술개발력 강화에 의한 중국 제품의 품질향상, ③ 이에 따른

41) 일 중경제협회(2003) 참고

수출경쟁력 향상, ④ 중국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첨단산업 중심)와 생산증대 등의 영향으로 일본과의 보완관계는 경쟁관계로 심화되면서 일본의 對中 및 對세계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간 경쟁관계의 심화는 일본의 對中 무역역조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對中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등의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⁴²⁾

<그림 4-2 > 일본의 중화경제권 다자간 무역구도 개념도



자료: 필자 작성

42) 일본은 2001년 4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과, 버섯, 왕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경과조치로서 발동하였으며, 이외에도 양파, 뱀장어, 미역, 마늘 등에 대해서도 정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직접투자정책의 변화

2002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의 확대와 WTO 가입으로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전년대비(실행기준) 12.5% 증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⁴³⁾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는 1992년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7년 43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01년 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1997년 이후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 규모가 감소한데는 중국의 외국인자본 우대세제의 철폐와 더불어 아시아 통화위기에 따른 아시아경제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중국의 우대세제정책 부활과 WTO 가입이 크게 작용하였다.⁴⁴⁾

한편 2002년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7%의 감소하면서 42억 달러 수준을 보였으나, 1995년 시점과 비교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어, 일본의 對中 투자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⁴⁵⁾ 2002년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는 NIES 및 ASEAN 4(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대한 투자 규모를 상회했으며, 7년 만에 중국은 일본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소폭에 그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43)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1995년(913억 달러)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1999년에는 412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624억 달러)로 전환되면서 2001년 692억 달러, 2002년 823억 달러를 기록한 상태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각 연도), 『國際貿易』 참고.

44) 1996년 이후 외국기업의 對中 직접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의 외국인자본관련 제도의 변화였다. 중국정부는 1996년 1월 對中 직접투자의 최대 인센티브제도였던 외국기업의 수입기계설비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결국 1998년부터 관세면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부활되었다.

45) 2002년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는 총규모 면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2년 1~9월까지의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4/4분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속도가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 일본기업의 신중한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실행기준)

(단위: 억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일 본	31.1	36.8	43.3	34.0	29.7	29.2	43.5	41.9
NIES	261.2	277.5	286.7	266.3	228.3	214.6	234.0	268.9
한 국	10.4	13.6	21.4	18.0	12.7	14.9	21.5	27.2
대 만	31.6	34.8	32.9	29.2	26.0	23.0	29.8	39.7
싱가포르	18.5	22.4	26.1	34.0	26.4	21.7	21.4	23.4
홍 콩	200.6	206.8	206.3	185.1	163.6	155.0	167.2	178.6
ASEAN 4	7.7	9.3	8.1	7.9	6.3	6.7	8.3	8.6
미 국	30.8	34.4	32.4	39.0	42.2	43.8	44.3	54.2
E U	21.3	27.4	41.7	39.8	44.7	44.8	41.8	37.1
합 계	375.2	417.3	452.6	454.6	403.2	407.2	468.8	527.4

주: 합계는 기타 국가 및 지역을 포함.

자료: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무역통계』.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동안 미국 및 유럽 기업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對中 직접투자를 전개하였다. 특히 1999년, 2000년에 걸쳐 이들 기업의 전자통신 분야에 대한 對中 직접투자는 각각 39억 달러, 114억 달러에 달해, 같은 시기 섬유분야에의 2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구미 기업의 對中 진출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를 촉진시켰으며, 아울러 일-중 경제관계 확대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IT 품목의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어 IT 관련 사업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며, 동시에 중점 산업개발

분야로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우선정책으로 전개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도 첨단산업 및 서비스 관련분야의 對中 직접투자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중국의 WTO 가입은 국유 중소기업의 도태를 야기하여 대규모 실업자와 해고 노동자를 양산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생산증대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이러한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은 2002년 일본 국제협력은행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⁶⁾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기업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현지부품조달 의무의 폐지’(회답기업수 440사 중 61.4%), ‘관세인하’(동 60.9%), ‘지적재산권 보호’(동 56.1%) 등으로 나타나, WTO 가입으로 규제완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개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의 564사 가운데 78.7%가 ‘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이라고 회답하였으며, 이를 위해 34.7%가 ‘기존의 생산라인 증설’을, 31.9%가 ‘신규 생산거점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신규 투자의욕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본기업은 정밀기계(45.5%), 전기전자부품(32.2%), 자동차조립(30.0%)에 있어서는 ASEAN 등 여타 국가에 비해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일부 일본기업 사이에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규제의 투명성과 중앙·지방정부의 통일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對中 직접투자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⁴⁷⁾ 구체적으로 중국정부가 공포하지 않는 법령은 아직 상당히 많으며, 설사 공포된 법령이라 할지라도 시행까지의 기간이 짧기

46) 일본 국제협력은행(2002) 참고

47) 일본 경제단체연합회(2003) 참고

때문에 외국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응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중국정부로서는 WTO 가입을 계기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법 체제 정비 등에 힘을 쏟고 있으나, 중국이 법치주의가 아니고 인치주의라는 비판을 회피하기에는 아직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본기업의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對中 직접투자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기대감과 신중론이 병행하면서, 직접투자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구미국가의 對中 직접투자의 흐름과 상이한 움직임은 회피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중국의 FTA 추진과 일본의 대응

가) 중·ASEAN FTA 구상전개

2001년 11월 중국은 중·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과 10년 이내에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한국(GDP 세계 12위), 일본(동 2위), 중국(동 6위) 등 경제력을 보유하면서도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을 제외하고는 FTA의 공백지대였던 동아시아에서 마침내 그 공백이 해소된다는 기대와 함께, 상호간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분야를 안고 있는 중국과 ASEAN이 어떠한 협정을 체결하는가에 대한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욱이 한국 및 일본, 대만이 제외된 FTA라는 점에서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FTA 구상은 그 이전부터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0년 11월 ASEAN+3 회의를 통해 ASEAN과 중국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제안했으나, ASEAN 국가들은 ASEAN+3에 의한 FTA의 가능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다. 당시 ASEAN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으며,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부터 AFTA의 역내평균관세를 5%

이하로 하는 등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중국은 전술한 2001년 회의에서 ①중국과 ASEAN이 각각 우위를 가지고 농업, 정보통신산업, 인적자원개발, 상호투자 및 메콩강 유역 개발을 협력 중점분야로 하고, ②향후 10년 이내에 ASEAN-중국 FTA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며, ③정치적 측면에서는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등의 3항목을 제안하였다. 특히 ①에는 쿤밍(昆明 : 중국 운남성)~방콕간 도로건설, 범아시아 철도건설을 위한 협력, e-ASEAN 계획추진, ASEAN IT 인재양성, 농업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ASEAN이 중국과 협력강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ASEAN 역내에서도 부상하는 중국경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또한 ASEAN도 중국과 함께 미국, 유럽이 직접투자의 유치에 중요한 국가이므로,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투자가 중국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ASEAN 내에서 확대되면서 마침내 중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⁸⁾

나) 일본의 대응

이와 같은 중국의 對ASEAN 접근과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 방향은 “이제 막 WTO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가입당시 약속한 이행사항의 전개과정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對中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FTA협상 시기 또한 이러한 정책방침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분간

48) 중국과 ASEAN의 관계는 무역과 투자 면에서 상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양자가 FTA협상을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상호 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경제관계는 각각 한국,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비해 아직 약하다고 할 수 있어, 중-ASEAN 간 FTA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丸屋豊二郎 石川幸一編著(2001) 참고.

은 지켜보는 상태이지만 그 후 對中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여 무역장벽을 상호 철폐할 경우, 산업의 보호장벽이 이미 낮아진 일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내 전문가들은 ASEAN과의 FTA는 지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FTA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내에 확산되어 있는 ‘중국경제 위협론’을 증명하듯이 일본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중 양국은 모두 경쟁력이 약화 또는 상실된 산업을 떠안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농업을 들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들 수 있다. 각각 자국 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큰 산업인만큼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은 고통과 정치적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불신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어, 양국간 FTA 구상논의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양국간 FTA 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로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및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ASEAN간 FTA에 의한 일본 산업의 공동화 심화현상은, 일·중 FTA가 체결되지 않는 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공장에서 가공되는 부품 및 원재료 생산을 중·ASEAN간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ASEAN 공장으로 이전하는 현실을 일·ASEAN간 FTA 체결로 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이 이미 이와 같은 시대에 돌입한 상태인 이상,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산업 공동화 해소를 전략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둘째, 일·중 양국간 FTA 체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역내 FTA 경쟁현상은 배타적인 주도권 다툼 등으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어,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이에 따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의 급속한 對中 경제협력 및 의존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일 FTA를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인식에 대한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중국 역시 일본과의 FTA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이는 곧 ‘ASEAN+3’의 막연한 형태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일본과의 FTA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의 FTA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우선 ASEAN+3의 공동연구의 진전 상태를 주목하고 싶다”고 언급,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당시 주룽지 총리의 제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최근 들어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주변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FTA 정책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는 만일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한국을 비롯해 적어도 홍콩과 대만까지 포함하는 ‘ASEAN+3+2’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미묘한 양안관계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대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내경제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에 있어 아시아에서의 대만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 향후 전망

이상과 같이 일본의 對中 무역 및 직접투자 정책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경제의 위상변화를 반영하듯, 일본의 對中 협력관계는 과거에 비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통해 양국간 상호 보완관계 및 수출증대 유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일본은 일·중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간의 무역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對中 수출의 60%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자본재의 수출확대에 더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소득의 증대는 내구소비재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전자기기, 자동차 등의 對中 완제품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⁴⁹⁾ 게다가 FTA는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기대효과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수출유발효과를 통한 일본기업의 對中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부문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현재의 對中 수입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우선 일본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⁰⁾

물론 일본정부 역시 현재의 일·중 양국관계를 고려할 경우, 일·중

49) 일본 자본재의 對中 수출은 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AV기기부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50)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일본기업의 對中 직접투자 전략은 제품별 분업·공정간 분업 형태에서 중국시장을 지향하는 지역완결형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對日 역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일본의 對中 수출액은 전년대비 32.2% 증가하였으나, 한편 對中 수입액은 10.0% 증가율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역수입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TA 체결의 전망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공업화의 진전으로 일부 첨단제품 분야에서 일본을 위협하는 한국을 비롯한 NIES 국가들 역시 여전히 일본의 고부가가치 원재료, 부품·소재, 기계설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본재에서의 중국의 對日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이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려는 데는 對日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산업의 생산·공급을 한국에 유치하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對中 관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일본의 고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과 ASEAN의 FTA 체결 속도이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한발 늦게 ASEAN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ASEAN과의 FTA 체결협상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만큼 일본은 중·ASEAN간의 FTA는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인식은 멕시코가 NAFTA, EU와의 FTA를 체결하면서 겪었던 불이익과 같은 일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중·ASEAN FTA가 체결될 경우, ASEAN 시장에서 일본제품은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이 ASEAN내 현지조립공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부품·원재료는 일본이 아닌 중국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저렴하므로, 일본기업은 당연히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이 ASEAN과의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 체결하지 않

을 경우 역시 일본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중국의 최종제품시장에서 일본제품은 ASEAN 제품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관세율만큼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조립하는 관세로 수입되는 부품·원재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다. 따라서 일본기업은 관세효과가 있는 ASEAN 공장에서 조립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앞으로 중국시장이 더욱 확대되더라도 그 수혜는 일본이 아닌 ASEAN의 몫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곧 미묘한 정치문제 등을 이유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일·중 양국이 결과적으로 ASEAN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향후 정책판단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일본은 중국과 FTA 체결에 있어 농산물 및 국내 산업보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ASEAN의 對日 FTA 전개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중국과의 FTA 체결 협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부문에서도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對ASEAN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1) 무역·투자정책의 변화

일본과 ASEAN의 경제관계는 한국과 중국의 ASEAN 관계에 비해 훨씬 긴밀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일본의 對ASEAN ODA이다. 일본은 ASEAN이 설립된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

제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對中 ODA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이며, 단일국가로서는 최대 지원국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ASEAN에 대한 지원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⁵¹⁾

이러한 경제관계에 힘입어 일·ASEAN의 무역관계는 전반적으로 확대 일로를 보여 왔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전후하여 일시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1999년 이후 ASEAN 국가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01년 일·ASEAN의 무역규모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일본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4%에 달했으며, ASEAN의 전체무역에서 일본의 비중 역시 15.4%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ASEAN간 무역구조는 일본이 ASEAN으로부터 원재료, 농수산물 등을 수입(전체 수입에 약 10% 비중)하여 완제품을 다시 ASEAN에 수출하는 형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對ASEAN 수입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02년에는 전체 수입 중 약 16%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수입품목 또한 광물성연료 중심에서 기계기기, 섬유 등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ASEAN 무역관계는 ASEAN 창설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평분업 정도가 진전되면서 상호 보완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내 무역증대 및 분업체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²⁾

일본의 對ASEAN 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의 영향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ASEAN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달성과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물론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맞물리면서 일본의 對ASEAN 직접투자를 일시적

51) 일본 ODA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는 ASEAN이다. 2001년 일본의 對ASEAN ODA 지원규모는 약 21.8억 달러를 기록, 총 규모의 30%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일본 외무성(2003) 참고.

52) 1999년 이후 일본의 對ASEAN 수출품목은 전기기기, 일반기계, 수송기기,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품목은 기계기기, 광물성연료, 식료품, 원료품, 섬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2002) 참고.

으로 감소시켰으나, 2002년 ASEAN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5.7%로 미국(17.2%) 다음으로 높은 상태이다.⁵³⁾

한편 일본의 對ASEAN 무역·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對中 정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본 국제협력은행(2002)에 의하면, 일본기업이 ASEAN에서 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회답기업 359사 중 60.4%)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비중(78.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기업은 여전히 ASEAN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신규거점 설립’을 통한 ASEAN내 사업의 확대·강화를 도모하는 기업은 11.1%로 나타나, 중국(31.9%)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ASEAN내 ‘기존 생산라인 증설’(48.1%) 계획은 매우 높게 나타나, 중국(34.7%)과 달리 ASEAN은 기존의 생산거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對ASEAN 무역확대 정책을 펼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SEAN은 중국과 달리 일본기업의 진출 역사가 오래된 관계로 이미 생산거점이 구축된 상태인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對ASEAN 직접투자는 <표 4-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시장에 중점을 두면서도 기존의 제조생산 거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략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위협도를 분산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일본 재무성의 통계에는 현지 일본기업의 재투자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할 경우, 일본의 對ASEAN 직접투자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일본의 무역·직접투자 정책은 중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ASEAN의 기존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AFTA의 진전으로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역내 무역활성화 및 비용절감 효과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53) ASEAN에 대한 국별·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영국(12.2%), 싱가포르(7.0%), 네덜란드(6.8), 홍콩(3.6), 대만(3.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SEAN Secretariat(2002) 참고.

ASEAN 시장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일본의 對ASEAN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엔,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ASEAN4	3,991 (33.5)	5,575 (42.6)	6,989 (46.8)	4,276 (51.2)	3,208 (40.2)	2,248 (34.3)	2,944 (38.1)	1,721 (25.4)
인도네시아	1,548	2,720	3,085	1,378	1,024	457	576	509
태 국	1,196	1,581	2,291	1,755	910	1,029	1,102	614
말레이시아	5,555	644	971	658	586	256	320	98
필리핀	692	630	642	485	688	506	946	500
NIES	3,121	3,986	4,186	2,259	3,567	2,964	4,474	2,383
한 국	433	468	543	387	1,093	899	680	763
대 만	439	587	552	287	318	563	399	457
홍 콩	1,106	1,675	853	770	1,083	1,034	370	248
싱가포르	1,143	1,256	2,238	815	1,073	468	1,223	915
중 국	4,319	2,828	2,438	1,363	838	1,099	1,082	2,152
아시아 합계	11,921	13,083	14,948	8,357	7,988	6,555	7,730	6,768

주: () 안은 아시아 역내에서 차지하는 직접투자 비중
자료: 일본 재무성

2) 對ASEAN 중시정책 전개

가) 연대강화의 필요성 고조

일·ASEAN의 긴밀한 경제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전개되어 온 일본의 ODA 지원 노력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SEAN 각국에는 자동차, 전기·전자관련 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은행(1993)이 제기하는 ‘동아시아의 기적’의 모델은 NIES와 ASEAN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3국에 더하여 바로 일본을 일컫는 것이었다.⁵⁴⁾

54) 한편 당시 중국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 보고서는 일본의 발전모델과 ASEAN 각국의 발전모델은 후발국이 선진국을 효과적으로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거시경제 운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일본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과정에서도 ASEAN에 대한 대규모 자금협력(신 미야자와 구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위기의 조기극복 노력을 지원하였다.⁵⁵⁾ 이러한 일본의 신속한 對ASEAN 지원은 ASEAN 국가들에게 對日 협력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일본의 존재가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편, 이에 반해 당시 미국과 EU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주원인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고려하지 않은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모델과 법적 제도의 미정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IMF의 구제 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자금 면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응은 아시아 통화위기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미국과 EU의 움직임은 아시아의 각국이 세계화 흐름에 편승하면서 개방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하지만, 이와 함께 아시아지역의 이익을 견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지역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되었다.⁵⁶⁾

이에 따라 일본은 물론 동북아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구상 및 논의의 중요성을 의식하면서도, ASEAN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지금까지보다 더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일례로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경제단체의 수뇌들이 매년 한결같이 ASEAN 각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ASEAN의 존재를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고

내용은 World Bank(1993) 참고.

55) 이홍배(1999) 참고

56)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2000) 참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對ASEAN 협력 및 지원 강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ASEAN에 급속히 접근하여 중-ASEAN FTA를 체결한다는 소식은 일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ASEAN 각국이 일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일본과 ASEAN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파트너라는 점과 중국과 ASEAN의 무역구조는 일본과 달리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SEAN의 對日 비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본의 낙관적인 판단을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對ASEAN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ASEAN 각국에 제시한 ‘포괄적 경제연대구상(Closer Economic Partnership: CEP)’은 2002년 1월에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FTA를 모델로 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제품의 관세인하는 협상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중국의 對ASEAN FTA 구상과 달리, ASEAN 국가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중국과 ASEAN이 FTA를 2010년까지 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한 데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FTA에 적극적이지 않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대해 목재, 팜 오일, 열대과일 및 쌀 등의 관세를 FTA 체결 전에 인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즉 중국의 협상은 매우 상인적이고, 형식보다는 비즈니스를 중시한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어, ASEAN 각국에 매력적인 조건이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듯, 일본은 20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기본적

57) 浦田秀次郎木下俊彦(2000) 참고

으로 일·ASEAN FTA 체결에 합의(2005년 협상 개시)하면서 적극적인 경제지원 및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금까지 이유와 형식에 치우친 논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중국의 對ASEAN 접근을 허용했다는 일본의 반성이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와 같이 중국을 의식한 일본의 對ASEAN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ASEAN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즉 ASEAN으로서는 중국과의 무역·투자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점이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국민의 복지후생을 증진한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후속조치로서 일본은 ASEAN 국가들의 농림산품 등의 분야에 대한 일본시장의 개방 요구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회인프라 정비, 기술자 교육 및 법률 정비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농림산품 시장 개방은 정치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업의 기업화 및 지원확충 등의 신규 조치 등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특히 일본의 시장개방은 전통적인 농업보호책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일본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농촌간 표의 비중을 시정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나,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농업부분의 개혁의지는 강하다고 할 수 있어,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위협에도 불구하고 만일 일본이 對ASEAN 관계를 일본 고유의 사정에만 연연하면서 표면

58) 현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전개하고 있는 구조개혁 구상은 과거 1980년대 다나카 내각이 추진한 ‘일본열도 개조론’보다 한 차원 높은 과감하고 대대적인 일본개혁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를 쇄신한다는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특구’구상 역시 정치와 농업부분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혁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흥배(2003) 참고.

적인 형태를 고수하려 할 경우, 아시아의 실질적 리더는 중국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만큼, 일본의 對ASEAN 중시정책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3) ASEAN의 FTA 확대와 일본의 대응

가) ASEAN을 둘러싼 FTA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ASEAN과의 FTA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0년 11월 ASEAN과의 FTA 체결을 처음 제안했으며, 2001년 11월에는 10년 이내에 중·ASEAN 자유무역 지역을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중·ASEAN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협력 기초협정」에 정식으로 조인하고, 2003년에는 2010년까지 FTA를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 조기 자유화에 관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전개하고, FTA의 체결기한은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ASEAN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신규가입) 4개국은 2015년까지 완성하며, 조기 자유화 조치로서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 대한 자유화(관세 인하)는 먼저 실시(Early Harvest)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이다.⁵⁹⁾

ASEAN의 역외국·지역과의 FTA 체결 움직임은 2000년 전후부터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1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일·ASEAN 포괄적 경제연대구상을 제안하였고, 그 후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2002년 11월 일·ASEAN간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연대구상을 10년 이내에 가능한 조기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미국 역시 2002년 10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ASEAN 이니셔티브(Initiative)' 구상을 표명하면서, ASEAN과의 FTA 체결 구상을 발표하였다. 인도와의 FTA는 2002년

59) 농수산물 8개 분야에 대한 조기 자유화, 즉 관세인하는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ASEAN 선발 6개국과 중국은 3년이고 캄보디아, 미얀마 등 신규가입 4개국과 중국은 7년 안에 완료하는 데 합의한 상태이다.

11월의 ASEAN·인도 정상회담에서 바지파이 인도총리가 FTA를 포함하여 10년 이내의 경제연대강화 실현 구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ASEAN과 CER(호주와 뉴질랜드 FTA)를 연대시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ASEAN 내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무역·투자부문의 연대강화에 국한하여 전개하고 있다. 한국도 2003년 본격적으로 對ASEAN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연대강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ASEAN을 둘러싼 FTA 논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 국가들의 對ASEAN FTA 체결의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5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GDP 5,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거대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더하여, 對ASEAN FTA를 먼저 체결하는 국가가 그만큼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전개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ASEAN과의 FTA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자원의 확보, 중국 위협론의 불식 및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촉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ASEAN이 FTA의 대상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ASEAN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ASEAN이 지역적으로 아시아 해양상업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¹⁾

한편 ASEAN 국가들 가운데 양자간 FTA 체결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뉴질랜드,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멕시코, 캐나다 등과 협상중에 있다.⁶²⁾ 그리고 싱가포르 다음으로 양자간 FTA에 적극적인 움직

60) ASEAN 국가들의 對中 FTA 체결논의는,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ASEAN내 관련 연구자와 민간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보다도 일본과의 FTA를 선행시켜야한다는 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木村福成·鈴木厚(2003) 참고.

61) 川勝平太(1997) 참고

62) 싱가포르·미국 FTA는 2003년 5월에 체결되어, 2004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싱가포르·호주 FTA는 2003년 2월 체결, 7월에 이미 발효된 상태이다.

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은 이미 바레인과 FTA 체결에 합의한 상태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과 협상 또는 검토중에 있다.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FTA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양자간 FTA에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던 말레이시아도 일본과의 FTA 체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 ASEAN의 FTA 정책

이와 같이 ASEAN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ASEAN을 둘러싼 FTA 체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싱가포르와 태국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FTA를 통해 자국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의 FTA 허브를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태국은 ASEAN의 정치·경제적 중심축으로 부상한다는 목적으로 양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되고 있는 ASEAN의 對中 FTA협상 전개는 일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일본으로 하여금 對ASEAN FTA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ASEAN에는 특별히 합의된 對세계 FTA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對中對日 FTA 추진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ASEAN은 대외적으로는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과 달리 정치·경제적 중심축의 부재로 인해 통합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ASEAN 각국의 이해차이 또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세계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나, 반면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7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수출구조도 매우 유사하다. AFTA의 최종 라운드에서 나타난 말레이시아 국민차의 예외조치 결정은 ASEAN의 구심력 약화와 리더십 부재의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⁶³⁾

그러나 금융협력에 있어서는 ASEAN의 모든 국가들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ASEAN은 아시아 통화위기의 재발 방지와 아시아내 자금조달처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ASEAN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ASEAN+3 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구상의 발전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SEAN에서의 움직임은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⁶⁴⁾

한편 ASEAN의 구심력 저하의 요인은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력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ASEAN 인구의 3분의 2, 전체 GDP의 50% 이상을 점하면서 ASEAN의 맹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일례로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94년 APEC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글 선언」을 채택할 정도였다. 그러나 동티모르의 독립과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트의 개발독재 체제가 붕괴되고 정치는 민주화되면서 하비비, 와히드 대통령을 거쳐 2001년 메가와티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경제상황은 여전히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조기 경기회복을 통해 정치안정과 정권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급격히 감소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우고 있어, FTA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로서는 중국의 對인도네시아 직접투자에 대해 경계심과 기대감을 안고 있으나, 만일 일본이 직접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일본의

63) 1992년 설립된 AFTA의 선행 6개국의 관세인하(0~5%) 대상품목의 비율은 98%로 높아져 자유화가 도모되고 있다.

64) 미국이 ASE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에 대해 암묵적인 용인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① 일본의 경제력 저하, ②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경제침체 상황이 맞물리면서 미국에의 영향상쇄, ③ ASEAN의 매력 저하, ④ 미국의 對중남미 중시, ⑤ 미국의 테러전략에 일본의 역할증대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0년 들어 IT산업의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FTA와 이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향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한 상태이다. 일본과의 포괄적 경제연대협정에 이어, 한국과도 FTA 체결을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싱가포르의 FTA 추진방식에 대해 ‘ASEAN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그 후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일본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 특히 원난성과 국지적 시장권 형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므로, 농산물, 자동차 등의 육상수송 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메콩강 개발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태국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투자환경 또한 여타 ASEAN 국가들에 비해 좋은 상태이므로, 일본기업은 여전히 태국을 ASEAN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국민들의 반중국인 감정이 없으며, 오히려 중국을 활용하는 비즈니스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태국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공존전략에 고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 또한 태국과 동일하게 일본과의 양자간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일본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심리적·물리적 유대관계 또한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일본으로서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야자열매 기름의 對中 수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일본의 對말레이시아 직접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서 ASEAN+3 구도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 일본의 대응

역설적이지만, 일본은 중국과 ASEAN의 FTA협상 속도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애써 불편한 내색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ASEAN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對ASEAN 접근과는 상관없이 전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가능하다면 중국에 앞서 ASEAN과의 FTA 체결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대내외 협상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또한 팽배하다.

물론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FTA 체결 국가 대열에 진입한 상태이고, 지역연대 강화의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선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FTA 체결에서 농산품이 제외된 것은 앞으로 일본의 對ASEAN FTA협상 과정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일본은 對ASEAN FTA 체결에는 농산품의 개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일본에서는 최근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하여 농업부문에 법인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농업의 모순을 국민 앞에 내보임으로써, 구조개혁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본농업의 우수한 점과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농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ASEAN이 희망하는 최대공약수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국내 정치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설득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일본의 FTA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對ASEAN FTA 체결에 매우 신중하고 전향적인 자세

로 임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에 앞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對ASEAN FTA 체결과 병행하여 한국과 FTA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농산품은 ASEAN과 달리 자국 농산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일 FTA 체결 가능성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향후 전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對ASEAN 무역·투자 정책은 ODA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어, 중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전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ASEAN내 생산거점에 대한 투자증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ASEAN 국가들은 일본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AFTA의 진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일본의 의도와도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은 일본과의 FTA협상에서 농산품의 자유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간호사 등의 인력이동 자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자는 상품무역에, 후자는 서비스무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이들 모두는 일본 시장의 신속한 개방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對ASEAN FTA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중국의 對ASEAN 접근을 견제한다는 외교상의 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對ASEAN FTA 체결은 기존의 ODA를 대신하여 FTA를 통해 ASEAN의 일본시장 접

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최대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부터 전개되어 온 일본의 對ASEAN 통상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일본은 對ASEAN FTA 체결을 계기로 농업 등 산업의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對ASEAN FTA 정책방향은 매우 전향적인 자세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보호책의 일환으로 전개해 온 관세정책을 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금의 일본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구조개혁을 FTA를 통해 단행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일본에 있어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 FTA에서는 ASEAN의 시장개방 또한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이점을 기대하고 있는 일본기업도 많다고 할 수 있다. ASEAN 국가들은 본래 높은 관세를 통해 국내상품은 물론 국내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은 문제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일본과의 FTA 체결로 인해 고관세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는 곧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 크다는 점에서 ASEAN과의 FTA 체결에 최대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으로 하여금,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과 함께 이들 국가에게 각종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對ASEAN FTA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ASEAN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우선적으로는 ASEAN의 일부국가들과 개별적 FTA를 전개하면서, 장기적으로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 對한국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1)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1960년대 이후 한·일 양국간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보완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對日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섬유, 철강, 1차산품, 기계류 등이, 그리고 對日 수입품목은 금속가공기계,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각각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對日 수출은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 완제품 수출인 반면, 일본의 對韓 수출은 원재료·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양국의 교역규모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998년에는 큰 폭의 감소세(전년대비 31.8%)를 나타냈으나, 1999년에는 다시 37.6%로 확대되었다. 2000년 증가율(전년대비 32.6%)은 1999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1995년 이래 축소되었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50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200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경제의 감속 등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으로 감소(전년대비 17.5%)했으나, 2002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⁶⁵⁾ 특히 1999년 들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기회복 움직임과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맞물리면서 플러스효과를 유발한 데 따른 것이며, 미약하나마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對日 우호관계 노력도 적지

65) 1995년 약 500억 달러에 달하던 한·일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8년 300억 달러까지 크게 축소되었으나, 1999년에 400억 달러, 2000년에는 다시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BASE”참고.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⁶⁶⁾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는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 확대라는 형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양국간 교역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1999년과 2000년 한국의 對日 수입 증가율은 각각 43.4%와 31.8%로, 이 시기의 수출 증가율(각각 29.6%, 29.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물론 같은 기간중의 對日 무역적자는 각각 83억 달러와 114억 달러에 달하여 對日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1998년의 46억 달러 수준을 훨씬 초과한 것이며, 2002년 역시 對日 수입은 12.1% 증가했으나, 對日 수출은 오히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47억 달러의 對日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⁶⁷⁾ 이와 같이 양국간 무역관계는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의존 및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양국간 무역·투자관계는 물론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일 FTA 체결논의에 핵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1978년부터 도입하여 20여 년 동안 주요 일본제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제한해 오던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1999년 6월 말 완전 폐지하였다. 특히 이 제도로부터 마지막으로 해제된 48개 품목의 대부분이 한국내 생산기반이나 일본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였기에 장기간에 걸쳐 해제를 연기해 왔던 품목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對日 무역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⁸⁾

66) 1998년 10월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그 동안 양국관계 개선에 장애물이었던 과거사 및 민족감정 문제 등을 해결하고, 21세기 한·일 양국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99년 3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채택하는 한편,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공동발표문’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관계개선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67) 1990년 이후 한국의 對日 수출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對日 수입은 8.4%나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對日 수입품목은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BASE” 참고.

한편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관계는 무역관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일 직접투자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1999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2년 말 현재 상대국에 대해 각각 6천만 달러와 14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규모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생산비용 면에서 비교우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반목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점과 투자를 위해 밟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및 투자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 역시 한국의 투자여건과 관련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의 불투명성과 자의적 운용, 그리고 세제부문을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입규제와 통관규제, 제도의 미정비와 갑작스러운 변경, 고용·노사관계의 규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⁶⁹⁾

이에 대해 한국은 제도 및 투자환경 면에서 투자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해 왔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욱이 일본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온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과감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⁷⁰⁾

물론 일본의 직접투자가 1990년대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경향

68) 1998년 12월 말의 32개 해제품목과 1999년 6월 말의 16개 해제품목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상열·이홍배(2001) 참고.

69) 일본 경제산업성(2002) 참고

70) 한국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과 1998년 초 노동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단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과건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1998년 12월에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구조개혁 추진과 고통분담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정훈(2002) 참고.

을 보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ASEAN에 대한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한국으로서도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1월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BIT)을 통해 양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일본 투자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가 정비된다면, 일본기업 또한 투자처로서 한국을 재인식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한·일 BIT는 양국간 FTA 체결을 향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보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직접투자는 의도된 정책 하에서 전개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직접투자의 정책방향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對韓 통상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양국간 FTA 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對韓 FTA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對아시아 FTA 추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FTA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토대로 對아시아 FTA를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對아시아 FTA의 전략적 구상을 검토하기 위해 한·일 FT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존재할 경우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양국간 FTA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일본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가) 한·일 FT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우선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은 ASEAN에 대해 FTA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더 크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사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태적 무역창출효과는 중국보다 ASEAN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중국의 이점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양대 시장의 통합으로 유발되는 동태적 이익인 집적과 규모범위의 경제도,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이익을 기대할지 몰라도 현상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직접투자(FDI)는 ASEAN을 경유하게 되므로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중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욱이 중국은 이행과정에 있어 자국 내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며, ASEAN 역시 노동집약적 생산에서 자본집약적 생산으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ASEAN의 과제는 ASEAN에 새롭게 가입한 4개국에도 큰 부담이며, 중국과의 노동집약적 부문의 경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은 중·ASEAN FTA는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쌍방에 의미 있는 FTA로는 전개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과 ASEAN, 한국과 ASEAN의 FTA 역시 쌍방에 유발되는 이익은 한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한국 또는 일본은 ASEAN이 요구하는 충분한 규모의 수출시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對ASEAN FTA의 최대 목표는 자본집약적 제품의 특화를 강화하고, ASEAN에게는 노동집약적 제품의 특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ASEAN으로서는 FTA를 통해 점진적이거나 자본집약적 제품의 특화를 추구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FTA 역시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수출

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자본·기술 또한 중국의 잠재력을 활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시각이다. 그렇기에 일본은 한·일 FTA를 통해 시장통합과 이에 따른 자본·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對中 FTA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외에도 미국이나 EU의 참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ASEAN은 ASEAN FTA를 완성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한 자국 내의 지역간 경제격차를 줄이고 체제전환경제 과정을 순조롭게 달성하면서, 중국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서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어, 한·일 FTA의 중요성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한·일 FTA가 존재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일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對아시아 FTA 추진과정은 매우 밝다고 보고 있다. 물론 한·일 FTA에 의해 형성된 시장의 규모는 NAFTA나 EU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아시아국가들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일 한·일 FTA 틀 안에서 ASEAN 각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시장 규모로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FTA 경우, 상대국에게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요인은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감되어 분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FTA 상대는 그 잠재력에 걸 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일 FTA를 통해 충분한 경제규모를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적 구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한·일 FTA에 중국이 가세하여 국제

분업을 전개할 경우, 한국 또는 일본이 단독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한층 효과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본 및 기술력 확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일본은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FTA를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일본의 최대목표는 한국을 포함한 FTA의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의 對아시아 FTA 정책은 한·일 FTA 체결을 통해 양자간 FTA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며,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시나리오는 일본의 對韓 FTA 체결에 대한 의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만일 한·일 FTA가 체결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아시아에서의 FTA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일 FTA 추진과 일본의 대응

가) 한·일 FTA에 대한 인식

한국과 일본은 정부 주도에 의해 제조업 제품의 수출 지향적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추진해 왔다. 가계부문의 저축률은 높고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자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한·일 양국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경제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직면했으며, 한국기업은 아시아 통화위기 후 국내경제 침체와 시장의 협소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아시아 통화위기의 후유증과 버블의 후유증 속에서 경제구조개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추진력으로서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을 높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국간에

는 한·일 FTA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양국의 경제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는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하는 데 크게 작용하면서 정책의 전환을 가져다 주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일 FTA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역창출효과 면에서도 양국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를 통한 양국의 이익은 매우 크다는 점과 집적효과 측면에서도 한·일 FTA는 시장규모의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일본으로 하여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은 경쟁 속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능력 향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업구조 측면에서도 한·일 FTA는 기업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국간의 생산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국간 논쟁이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정치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협상과정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및 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한다면, 비교우위를 통한 특화전략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한·일 FTA의 체결은 그 반대에 비하여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국내시장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과 일본 기업이 만일 한·일 FTA를 체결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한다면, NAFTA나 EU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규모의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FTA는 단순히 무역 자유화와 관세인하 효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가능한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일본은 한·일 FTA가 양국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체제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전략적 협조체제는 미국이나 EU 기업과의 경쟁에서, 개별적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EU나 NAFTA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나, 만일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연대협력은 미국이나 EU로부터의 수입제한조치 등과 같은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한·일 양국은 중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문제 또한 한·일 양국이 공조체제를 활용한다면, 수입제한조치 등의 협상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다. 이 외에도 한·일 양국 기업의 對中 직접투자에서도 양국간 연대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즉 한·일 기업의 對中 직접투자 경쟁은 양국 경쟁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對韓 FTA 추진은 일본경제의 구조개혁 측면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출 증대 등의 국내적 요인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메커니즘 구축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향상 등의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한·중·일 FTA 및 ASEAN+3 구상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이 對칠레 FTA협상에서 예외품목(2품목 제외) 없이 체결된 데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싱가포르 등과의 협상과정에도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 일본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단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일본에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 한국 내의 對日 무역수지 확대 우려와 일본 내의 농업부문에서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신중한 견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간의 FTA 전망에 대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애써 내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내 對中 위협론이나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본은 한·중 통상마찰은 일본과 달리 마늘에 국한된 상태이며, 이 문제는 한국의 양보로 인해 조기 해결된 점에 유의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양국간 문제가 정부차원이 아닌 기업차원에서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간의 원활한 경제관계는 일본에 있어 한·중·일 3국간 FTA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3국간 공동연구 추진 및 ASEAN+3 틀 안에서의 협력확대 방안 논의 등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간 FTA보다는 ASEAN+3에서의 FTA 체결을 보다 더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ASEAN+3의 구상은 역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workability) 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ASEAN+3 구상이 경제통합의 상설기관으로 확립될 경우, 미국의 對日 통상압력의 비중을 억제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EAEC(또는

EAEG) 구상을 제창했을 때,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3 구상이 실질적으로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한·중·일 3국이 ASEAN과 어떠한 연대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에 따라, 미국의 움직임은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다. 그 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EU 역시 ASEAN+3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압력을 행사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SEAN+3 구상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EU로서는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미국에 동조하여 차별 철폐를 적극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일본의 대응

이상과 같이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ASEAN이나 중국의 경우 국내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가능한 신속히 매듭짓고 이를 토대로 對ASEAN, 그리고 對中 FTA를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 FTA협상 역시 이제 막 정부간 본 협상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며, 아직 한국에서는 對日 무역역조 시정 및 산업보호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쟁정책이 도입되어 제품의 차별화와 특화산업을 유발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정이다. 특히 농업·수산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분야의 기업 통폐합이 어떠한 형태로 조정되느냐에 따라, 양국

간 FTA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도 對日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일본과의 FTA가 없을 경우, 일본과 동일하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시장확대 및 경쟁력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기업의 위상저하를 의미하며, 나아가 기업문화 및 조직형태의 한국적 특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는 양국의 국익을 확보해 나가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일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EU에 대한 협상력 강화에도 양국간 FTA를 통한 정책적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지며, 시장규모의 확대는 NAFTA-EU 수준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한국의 적극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일 FTA를 토대로 ASEAN 각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협상을 확대한다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상태이다. 그리고 일·싱가포르 FTA는 상징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일본의 실질적인 FTA는 ASEAN 4개국,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과의 FTA는 일본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한·일 양국과 ASEAN과의 FTA를 통해 중국에 충격과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정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시야에 둔 단계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향후 전망

한일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1년 10월 일본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일본기업의 기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⁷¹⁾

일본이 협상검토하고 있는 FTA 가운데, 한일 FTA를 희망하는 기업은 40%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으며,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기업 또한 37%(부정적 영향 8%)에 달하였다. 특히 업종별로는 운수·통신부문에 60% 이상의 기업이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싱가포르가 약 35%, 멕시코, 캐나다, 칠레와의 FTA가 약 15% 이하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03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을 통해 2005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국은 이에 앞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에 걸쳐 총 8차례의 양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조정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일 FTA는 양국 공동의 이익(win-win situation)을 실현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⁷²⁾ 더욱이 양국은 현안과제 중 핵심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FTA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반대의견 또한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국간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은

71) 일본경제연구센터(2001) 참고

72) 김양희(2003) 참고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한·일 FTA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을 포함한 ASEAN+3 구상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의 FTA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대과제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으로서는 한·일 FTA를 對아시아 FTA 추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어떠한 형태로 구축하는가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과의 FTA가 단순히 국제통상정책 차원의 관세철폐 효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협력관계의 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FTA 자체의 경제효과보다는 이를 계기로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폭넓게 구축하여 쌍방의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는 동시에, 좋은 이웃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본의 노력은 한국내 역사적 반일 감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⁷³⁾ 결국 한국과 좋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달성은 어렵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73) 木村福成·鈴木厚(2002) 참고

제5장 對중남미지역 통상정책

1. 개관

일본의 對중남미 경제협력관계는 1950~6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으나, 1970년대 들어 중남미의 정치불안과 경기침체, 일본의 對아시아 관심고조, EC 통합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양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미주지역에서의 지역블록화 현상과 중남미국가들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對중남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은 멕시코와 FTA 체결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중남미국가가 일본의 경제협력 상대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기업이 중남미 국가와의 FT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對중남미 통상정책은 미국과의 경쟁 및 결속 강화에 기초를 두고 추진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의 ‘미주지역의 무역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적 전략으로서, 중·저급 기술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 경쟁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원료를 비롯한 중·저급 기술제품 등을 저가로 수입하기 위해 관련 산업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써, 對중남미 수출입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개된 일본기업의 對중남미 투자확대는 중남미국가들의 생산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시에 미국의 對중남미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⁷⁴⁾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은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對美 관계라는 점에 입각하여, 對美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과 對美 결속강화를 위한 전략의

74) Leon Hollerman(1988) 참고

일환으로 對중남미 경제협력을 추진한 측면 또한 강했다고 할 수 있다.⁷⁵⁾ 또한 일본은 중남미 지역에서 천연자원 및 산업부문의 대규모 투자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협력과 중남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DA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IMF,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한 협조융자방식을 통하여 對중남미 자금협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감소,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슬럼화 등으로 중남미지역의 환경문제가 지구차원의 문제로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은 최근 지구촌 환경문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對중남미 ODA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8년 이후부터 일본은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일본기업의 불이익 해소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전개가 對중남미 통상정책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미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는 1992년 對칠레 FTA를 시작으로 1994년 NAFTA, 2000년 멕시코·EU FTA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일본정부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현재 싱가포르에 이은 제2의 FTA 체결상대로서 멕시코와의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멕시코 FTA협상은 일본에 있어 농수산물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는 본격적인 FTA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본과 중남미국가간의 무역·투자관계의 특징을 파악한 후 對중남미 통상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전개되고, 중남미국가들과의 FTA 체결 논의현황 및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전망 및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75) Susan Kaufman Purcell and Robert Immerman(1990) 참고

2. 통상정책의 주요내용

가. 무역·투자관계의 특징

일본의 對중남미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까지 중남미지역은 일본의 수출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석유위기 이후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주요 자원개발 확보기지로서 주목받아, 일본의 수출입 규모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남미의 정치불안과 외채위기로 인한 경기후퇴, 일본의 對아시아 진출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對중남미 투자가 수출대체효과를 유발하고, 중국을 비롯한 對아시아 수입이 증가한 결과, 일본과 중남미지역의 수출입 관계에서 양국이 점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2000년 이후에는 일본의 경기부진에 의한 수입감소와 중남미 경제의 불안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교역 비중뿐만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일본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對중남미 국가의 비중은 1970년대 절정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1> 일본의 對중남미 수출입·비중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기간	수 출			수 입		
	총수출 (A)	對중남미 (B)	비중 (B)/(A)	총수입 (C)	對중남미 (D)	비중 (D)/(C)
1960	4,055	304	7.5	4,491	311	6.9
1965	8,452	488	5.8	8,169	707	8.7
1970	19,318	1,187	6.1	18,881	1,373	7.3
1975	55,753	4,765	8.5	57,863	2,524	4.4
1980	129,807	8,917	6.9	140,528	5,700	4.1
1985	175,638	8,486	4.8	129,539	6,242	4.8
1990	286,948	10,280	3.6	234,799	9,851	4.2
1995	442,937	19,696	4.4	336,094	11,924	3.5
2000	480,701	21,109	4.4	381,100	11,028	2.9
2001	405,155	17,942	4.4	351,098	9,749	2.8
2002	415,862	16,191	3.9	336,832	9,543	2.8

자료: 일본무역진흥회, 『日本の國地域別 貿易統計』, 각 연도.

한편 일본의 對중남미 직접투자는 중요한 수입원 및 수출시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어 對중남미 수출입 증대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1960년대 중반 자원보유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거세지면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중남미 자원개발투자를 증대시켜왔다. 따라서 투자분야에는 주로 천연자원개발이 집중되었고, 철강 및 자동차 등 일부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對중남미 투자는 1960~70년대에 크게 확대되면서 총투자 규모가 약 60억 달러로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의 對중남미 투자비중은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중남미 각국의 외채위기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면서 3%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중남미 경제가 개혁과 안정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對중남미 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對중남미 비중은 1990년 6.3%에서 1998년 15.9%로 확대되었고, 2001년 對브라질 투자규모의 증가에 힘입어 24.2%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일본의 對아시아와 對중남미 투자추이를 비교해 보면, 일본의 對아시아 투자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선 1997년부터 일본의 對중남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1990년대 일본의 對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51~ 2001
케이만군도	158	647	841	272	659	1,041	2,538	4,495	2,196	2,736	4,996	27,958
파나마	1,557	938	1,390	1,655	1,660	1,009	1,119	1,040	1,384	1,300	971	30,296
브라질	171	464	419	1,235	301	822	1,182	466	641	225	1,370	13,929
버진아일랜드	614	129	64	214	144	757	681	178	1,019	11	-	925
아르헨티나	40	18	34	21	117	13	57	128	8	41	17	675
멕시코	193	60	53	613	206	113	320	83	1,453	208	44	5,251
베네수엘라	102	26	20	6	28	59	36	24	-	2	-	708
칠레	75	27	3	14	137	2	23	12	13	28	30	675
콜롬비아	0	0	-	23	21	2	14	11	-	-	-	212
중남미	3,337	2,726	3,370	5,231	3,877	4,446	6,336	6,463	7,283	5,232	7,658	96,597
아시아	5,936	6,425	6,637	9,699	12,264	11,614	12,181	6,528	7,013	5,931	6,178	138,073
합계	41,584	34,138	36,025	41,051	50,694	48,019	53,972	40,747	65,312	45,580	31,606	803,917
중남미/전세계	8.0	8.0	9.4	12.7	7.6	9.3	11.7	15.9	11.2	10.8	24.2	12.0
아시아/전세계	14.3	18.8	18.4	23.6	24.2	24.2	22.6	16.0	10.7	12.2	19.5	17.2

자료: 일본무역진흥회(2002),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

국가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역외금융센터가 위치한 파나마, 케이만 군도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으며, 이들 국가를 제외한 실질적 투자대상국으로는 브라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

롬비아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개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와 칠레 등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및 자금협력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FTA 논의현황과 주요현안

1) 對멕시코·칠레 FTA 논의현황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중남미국가들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MERCOSUR를 비롯한 중남미 역내국가간 FTA는 물론 칠레·캐나다 FTA 등을 비롯한 중남미 역외국가와의 FTA도 활발히 체결되었다. 특히 중남미국가 중 멕시코는 현재 NAFTA, EU 등을 포함하여 총 31개국과 FTA를 체결한 결과, 일부 농산품을 제외한 미국제품의 수입관세를 2003년에 이미 철폐했으며, 2007년부터는 EU제품의 수입관세마저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와 함께 경제개방 및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칠레도 이미 EU와 FTA 교섭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도 EU와의 FTA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남미국가들은 최근 FTA 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게다가 2005년 창설 예정인 FTAA의 구성멤버로도 가입할 예정이다.

〈표 5-3〉 GATT/WTO에 통보된 중남미국가의 FTA 체결 현황

	명 칭	발효 일시	분 류
중남미 역내	중미공동시장(CACM)	1961년 10월 12일	관세동맹
	카리브공동체(CARICOM)	1973년 8월 1일	관세동맹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1981년 3월 18일	자유무역협정
	안데스공동체(CAN)	1988년 5월 15일	관세동맹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1991년 11월 29일	관세동맹
	멕시코칠레	1999년 8월 1일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
	칠레코스타리카	2002년 2월 15일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
중남미 역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1월 1일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
	칠레캐나다	1997년 7월 5일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
	멕시코이스라엘	2000년 7월 1일	자유무역협정
	멕시코EU	2001년 3월 1일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
	멕시코EFTA	2001년 7월 1일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협정

주: 상술한 FTA 외에도 ‘개발도상국간 무역교섭에 관한 의정서(PTN)’, ‘개발도상국간 일반무역특혜 시스템’(GSTP)에 많은 중남미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자료: 浦田秀次郎 編(2002), 『FTA 가이드북』.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에 이은 FTA 체결 상대로서 FTA 체결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남미국가 가운데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FTA 체결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일본과 중남미 국가간에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멕시코 FTA협정은 일본에 있어 농업분야의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⁷⁶⁾ 특히 일본

76) 일·멕시코 FTA는 1998년 6월 에르미니오 브랑코 멕시코 상무공업진흥장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 후 양국은 일본무역진흥회와 멕시코의 상무공업진흥성간에 ‘일·멕시코 경제관계 긴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2001년 6월 멕시코 폭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양국간 FTA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방침에 합의, ‘FTA 공동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이 공동연구회는 2002년 7월에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양국은 2002년 10월부터 일·멕시코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협상을 전개해 왔다.

이 멕시코와 칠레를 FTA 체결 대상국으로 선택한 데는 무엇보다도 일본 기업의 북미, 중남미, EU지역의 진출거점 확보 및 FTA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 해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남미국가 중 이들 국가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NAFTA, EFTA(4개국), 이스라엘, 중남미국가(9개국)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남미국가 중 EU(15개국)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이러한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일본기업의 북미, EU, 중남미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의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남미국가 중 가장 먼저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단행한 칠레를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하면서, 對칠레 FTA 체결이 일본의 구조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칠레 역시 멕시코와 동일하게 다각적인 FTA를 체결한 결과, FTA 네트워크가 중남미와 북미지역을 포함한 미주지역뿐만 아니라 EU, 한국, 뉴질랜드, 호주까지 확대되고 있어, 중남미 FTA의 중심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FTA를 체결한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인하한 상태이지만, FTA 미체결국인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약 16%의 평균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구미기업과 일본기업간의 관세차이로 일본기업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남미 시장에서의 일본제품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2003년 5월 멕시코 폭스 대통령은 정부조달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자국기업 및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한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영석유공사 등의 입찰에서 일본기업이 배제되는 사례도 속출하였다.⁷⁷⁾

77) 일-멕시코간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는 만일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연간 4천억 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對멕시코 FTA 조기체결 요청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양국간 FTA는 농업분야에 대한 일본정부의 양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멕시코 FTA 체결 논의는 양국간에 FT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기업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기업을 비롯한 일본 산업계의 위기감에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4〉 일·멕시코 FTA 논의 현황

일 시	일·멕시코 FTA 논의 현황
2001. 6	·멕시코 폭스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고이즈미 총리와 FTA 추진을 위한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에 합의
2001. 9 ~ 2002. 7	·일·멕시코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1년 9월부터 7차례의 실무회의를 시행, 2002년 7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
2002. 10	·2002년 APEC 회의시, 일본과 멕시코 양국 정상은 최종 보고서를 기본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
2003. 8	·2003년 8월 일본의 주요 경제 4단체는 FTA 조기체결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일본정부에 제출
2003. 10	·멕시코 폭스 대통령 방일시, 양국 정상은 일·멕시코 FTA 체결을 위한 최종합의의 보류를 결정

자료: 일본 외무성 관련자료를 참고로 작성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멕시코의 전제조건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간 FTA협상은 교착상태에 놓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일본무역회의 등 주요 경제 4단체는 당시 멕시코 폭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즈음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농업분야에 대한 양보를 촉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하는 등 양국간 FTA 조기 타결을 위한 원만한 정부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2003년 10월 일·멕시코 정상회담에서의 FTA 체결을 목표로 총 11회의 협상을 개최했지만, 농산물 관세를 둘러싼 이해조정이 결렬되면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양국은 단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FTA협상을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동성

명만을 발표한 상태이다.

한편 일·칠레간 FTA는 1999년 11월 칠레의 바르데스 외무장관이 제안 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2000년 5월 일본무역진흥회와 칠레의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칠레 FTA 연구회’를 발족했으며, 이 연구회는 1년 동안 총 8회에 걸쳐 양국간 무역·투자 현황, 일·칠레 FTA가 양국의 무역, 투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연구하여 2001년 6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후 2002년 5월에는 양국의 민간경제단체인 일·칠레 경제위원회가 양국간 FTA 조기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2003년 2월 일·칠레 정상회담을 통해 칠레 라고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신속한 FTA협상 추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전개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 정부간의 FTA협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표 5-5〉 일·칠레 FTA 논의 현황

일 시	일·칠레 FTA 논의 현황
1999. 11	·칠레가 일본정부에 FTA 검토제안을 요청함.
2000. 5 ~ 2001. 6	·일본무역진흥회와 칠레 외무성은 2000년 5월 공동연구회를 개시, 2001년 6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
2002. 5	·2002년 5월 양국의 민간경제단체인 일·칠레 경제위원회는 양국간 FTA 조기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2003. 2	·칠레 라고스 대통령이 FTA협상 개시를 촉구

자료: <표 5-4>와 동일

2) 일·멕시코 FTA 현안과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멕시코 양국은 7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회와 11차례의 실무자급 교섭회의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대응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수산물 관세인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일·멕시코간 무역·투자가 양적인 증가를 이루고 있지만, 상호간 경제관계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양국의 상호 보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심화·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회는, 양국은 첫째, 무역·투자 자유화의 유효한 방법으로서 FTA 조기체결이 바람직한 수단이며, 둘째, 무역·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정비와 각종 제도측면의 정비·완화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연대협정 체결이 효과적이고, 셋째, 이러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FTA 체결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조달, 외국인 투자 등 대부분의 내용은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멕시코 정부의 돼지고기 등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요구는 일본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양국간 FTA 체결 합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일·멕시코 FTA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관련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對중남미 FTA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요 품목별 관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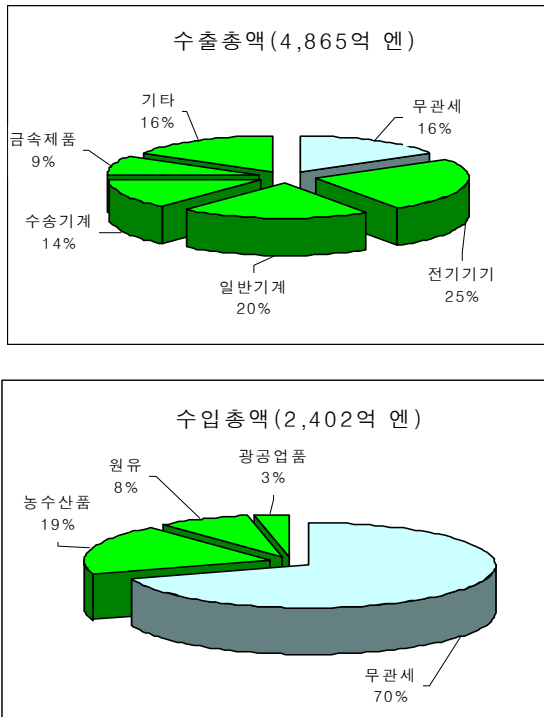
일본과 멕시코간 관세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對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 농수산물, 원유, 광공업품 일부를 제외한 총 수입금액의 70%를 무관세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對멕시코 수출품에서 수출금액의 16%를 무관세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對멕시코 수출품에 적용되는 평균관세율은 일본과 경쟁국인 미국 및 EU의 수출품 평균관세율(5%)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16.2%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이 멕시코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멕시코는 공동연구회에서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연차적 관세인하를 시행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과도 연차적 관세인하를 전개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일·멕시코 FTA의 본격적인 협상단계에서는 對멕시코 농산물수입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멕시코는 對日 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농업분야에서 일본의 양보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에 대해 과도한 관세인하 및 철폐는 어렵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⁷⁸⁾

<그림 5-1> 일본의 對멕시코 수출입 현황과 무관세 범위



자료: 일본무역진흥회(2003), 「經濟連携について」.

78) 일본 농림수산성(2003) 참고

나) 관세인하를 둘러싼 논의

양국은 공동연구회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관세철폐 검토과정에서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상태이다. 2003년 4월 7~11일 동안 개최된 제5회 실무자급 협의에서 일본측은 농수산물의 경우 최종 관세철폐까지의 경과기간과 예외품목을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특별 세이프가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멕시코측은 對日 광공업품의 관세철폐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멕시코 국내 산업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품목을 제시할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였다.

또한 2003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전개된 정부간 교섭에서 일본측은 농산품과 비농산품의 구별 없이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측은 10년 이내에 일본의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농산물 분야(피혁제품, 임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예외품목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멕시코측은 일본측이 구체적인 관세철폐품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농산물에 대한 예외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품목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일본측에 재차 강력히 요구하였다.

〈표 5-6〉 관세인하를 둘러싼 양국간 협상 개요

	일 본	멕시코
제5회 (4/7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까지의 경과기간 및 예외품목, 특별 세이프가드의 설치 필요 - 농산물에 대한 충분한 배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측은 광공업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이상, 일본측이 농업분야에서 만큼 양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 일본측이 농수산물의 관세철폐품목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청
제6~9회 (5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비농수산물의 구별 없이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 - 농수산물의 관세철폐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외품목 및 특별 세이프가드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측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비농수산물 분야(임수산물, 피혁제품 등)에 대해 예외품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 - 비농수산물에서의 예외품목 인정은 불가능 - 일본측이 농림수산물의 관세철폐 품목 제시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
제10~11회 (9 ~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53품목의 관세철폐품목을 제시(돼지고기의 채협상 주장) - 바나나, 포도 등의 과실을 포함한 농산물과 임수산물을 관세철폐 품목으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철폐 추가품목에 돼지고기, 오렌지 주스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 - 화물자동차를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

주: 제10~11회의 교섭개요는 주요 신문기사 참고.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3), 「日·멕시코 FTAの交渉状況」.

이에 따라 일본측은 일·멕시코 FTA 체결을 위해 2003년 9월 총 253품목의 농산물 관세 철폐안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멕시코측은 일본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제안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2003년 10월 8일 협상에서 바나나, 포도 등의 과실과 벌꿀 등을 포함한 50개 농산물과 약 20개 임·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일본측은 추가 제안품목에서 관세철폐의 핵심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돼지고기에 대한 멕시코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 후 2003년 10월 16일 마지막 협상에서 일본측은 돼지고기 관세를 4.3%에서 2% 정도로 인

하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멕시코측은 10년 이내 전품목의 관세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관세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양국은 농산물 관세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에 실패하면서 FTA 체결을 위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향후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멕시코 FTA의 조기체결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멕시코의 對日 수입은 미국 등 FTA 체결국의 수입으로 대체되어 일본의 對멕시코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멕시코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제품의 점유율은 1994년 NAFTA가 발효된 시점에서는 6.1%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3.7%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반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對멕시코 발전 플랜트 수주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97~2000년 동안 일본기업은 멕시코의 발전프로젝트 총규모의 43.9%를 수주한 바 있으나, 멕시코와 EU간 FTA 발효로 인하여 EU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2001년 일본의 수주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셋째,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부품 조달처가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본내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마지막으로, 관세부담으로 인하여 일본계 멕시코 진출업체가 차지하는 멕시코 시장에서의 제품 수입판매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가 일·멕시코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시종일관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농업시장의 개방문제였다. 양국간 공동연구회가 개시될 당시, 일본 농수산성은 “농수산품의 관세인하는 WTO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멕시코 FTA 조기 체결을 목표로 한다면, 일·싱가포르 FTA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⁷⁹⁾ 물론 공동연구회의 논의과정에서 일본 농수산성은 “농업이나 농산품 무역·관세 상황과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단계에서 농림수산업 관련 족의원을 비롯한 농업단체들이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멕시코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일본정부는 FTA 조기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협상과정에서는 어떠한 해소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칠레와의 FTA협상 전개과정에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관계로, 일본의 對칠레 FTA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 이 구상의 현실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부는 향후 對중남미 FTA 전략에 있어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와의 FTA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對멕시코 FTA를 기점으로 對칠레 FTA 추진이라는 對중남미 통상전략은 농산물 개방문제로 암초에 부딪친 상태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일본정부의 빠른 FTA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농업 등 경쟁력 상실 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더 체계적인 FTA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물론 일본정부로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는 있으나, 현안과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을 주도해 간다는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일·멕시코 FTA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본의 對중남미 통상정책 기조는 FTA 추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79)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SEPA)에서는 농림수산물 중 WTO 양허세율이 0%인 것과 WTO에서 양허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실제 관세율이 0%인 것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과 전망

가. 통상정책의 특징

1)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일본의 통상정책은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중요시해 온 반면, 2국간으로 한정되는 양자간 협상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과 양자간 협상을 동시에 중시하는 重層的 통상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변화는 2001년 통상백서에서도 나타나듯이, ① 새로운 통상규범의 신속한 제정, ②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③ 선행적인 국제적 통상규범 제정을 통한 경험·노하우의 축적과 다자간 통상규범 마련 및 협상 전개 주도, ④ FTA 등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 회피, ⑤ 국내경제의 구조개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는 WTO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일본경제의 재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시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5가지의 목적에서 ①과 ②는 WTO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고려한 것이고, ④와 ⑤는 일본의 국익추구를 의미하며, ③은 양자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은 ‘WTO 체제의 보완’을 의미하고 있다. 산업현장은 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WTO가 당분간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분야, 즉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한 규범제정이 가능

한 FTA를 통해 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WTO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용인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일본으로서는 FTA의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안이었을 것이다.

②는 ‘WTO 체제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FTA를 통해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물론 상호 자극을 유발하여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WTO 체제에 공헌’한다는 관점이다. FTA를 통해 선행적으로 고도의 통상규범을 책정할 경우 이는 다자간에서 동일한 규범을 책정할 때 그만큼 경험·노하우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WTO에의 공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통해 FTA 상대국과의 원활한 협조 등을 도모할 수 있어, 다자간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점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④는 직접적으로 ‘국익의 추구’를 나타낸 것이다. 소위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이익감소를 만회하겠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국가와 FTA를 체결한 제3국의 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본기업간의 경쟁상 불이익을 회피한다는 차원에서 전개된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⑤에서는 ④보다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 ‘국익 우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FTA를 통해 상대국의 자본·기술 및 인적자원을 유치하여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일본경제 활성화와 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인은 고이즈미 현내각이 FTA의 추진배경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정책전환은 기존의 WTO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어, GATT/WTO 체제 하에서 최대 수혜를 누려온 일본의 수동적인 자세와 신

중함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통상정책이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역시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이 통상정책을 전환하기 이전에 FTA 부정론을 전개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당시 일본에 있어 FTA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아시아경제의 雁行型 발전과 고도성장의 선두주자였던 일본은 1990년대 전반까지, 역내의 ‘무협정 경제통합’과 자연발생적인 성장 역동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⁸⁰⁾ 그렇기에 굳이 법적 규범을 가지는 FTA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는 이러한 일본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위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負의 유산을 떠안은 상태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이 FTA를 부정해 온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아시아에서의 수동적 자세를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였으며,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게 맹목에 가깝게 협조하는 국가였다. 그렇기에 국제통상질서의 대표적인 틀이었던 GATT의 무차별원칙에 충실했으며, 이 원칙의 예외로 규정된 FTA, 미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전개를 부정해 온 측면 또한 강했다고 할 수 있다.⁸¹⁾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에서 보여준 미국의 소극적이면서 고압적인 자세는 일

80) 宗像直子(2001) 참고

81) 일본은 1990년대 초 동아시아국가들로 구성되는 지역주의 구상으로서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에 대해, 미국이 반발하자 이를 고려하여 찬성하지 않았다.

본과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98년 들어 일본외교의 기본방향을 ‘대미관계 최우선’ 노선에서 ‘동아시아연대 중심’ 노선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통상정책이 다자주의에서 양자간 중심 FTA 추진으로 전환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별 통상정책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에서 양자간 FTA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EU를 위시한 구미지역에서는 FTA 구상이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 중국, ASEAN을 위시한 아시아지역과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지역에 대해서는 FTA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하에서는 전술한 각 지역에 대한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가) 구미지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관계는, 초기 일본경제 부흥을 외국(주로 미국)이 지원한 시기를 제외하면, 구미와의 통상마찰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가운데 유럽과의 통상마찰은 상호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었던 1980년대에 대두되어 일본의 내수확대, 시장개방 등의 문제로 비화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경제의 버블 붕괴에 수반하여 일본의 對EU 무역흑자가 축소됨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의 주된 수출대상국이었던 미국과의 사이에서는 통상 면에서 강단 긴장관계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미·일의 통상마찰은 초기에는 면제품의 對美 수출을 둘러싸고

발생했지만, 그 후 주된 수출상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이동하고, 더 나아가 가공조립제품에서 하이테크제품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철강, 텔레비전 수상기, 공장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의 對美 수출이 양국간 통상마찰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통상마찰의 중심은 점차 개별품목의 개방요구에서 일본의 시장개방이나 수입확대와 같은 거시경제정책의 시정을 둘러싼 것으로 변해갔다. 본래 일본의 시장개방은 1960년대 시작된 무역자유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 초에는 관세나 수입제한에 관한 자유화의 정도가 구미와 거의 같은 수준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구미에서는 일본이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미국은 결국 2국간 협의를 통해 일본에 시장개방과 수입확대를 요구함으로써 미·일간에는 격렬한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통상마찰은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계속되었지만, 미국경제가 미증유의 호황을 구가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점차 진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對日 통상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 클린턴 정권이 1996년에 재발족했지만, 의외로 미·일간의 새로운 통상협정의 장은 설치되지 않았다. 양국간에 새롭게 문제가 된 것은 단지 사진필름·인화지의 문제에 불과할 정도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일본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사용하는 빈도도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미·일 쌍방 모두 통상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전술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양국간의 통상마찰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對日 통상마찰 대응방법도 온화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구미지역에 대해 시대에 따라 상이한 통상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WTO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자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통상마찰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적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자세로 양자간 협의에 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WTO 발족 이후에는 전술한 통상문제를 양자간 협의로부터 다자간 협상 테이블로 이동시켜 논의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의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의 부당성을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 아시아지역

한편 일본은 역동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對아시아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FTA를 통해 일본기업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무역 및 투자기회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일본에게 그에 따른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어,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중 무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만, 홍콩 등 중화경제권을 포함하는 다자적 무역구도하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중간재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간다는 전략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對中 직접투자 역시 무역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장확대를 겨냥한 신규투자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법·규제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대감과 신중론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의 중점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對中 FTA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일·중 FTA 체결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정치적 불신감과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주도권 상실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對아시아 FTA 추진은 궁극적으로 對中 FTA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의 전개 방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對ASEAN 경제관계는 ODA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중·ASEAN간 FTA 구상은 당연히 일본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나, 일본의 對ASEAN 무역·투자 확대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對ASEAN 끌어안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강화 프로그램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對ASEAN 중시 정책은 중국에 대한 위협도를 분산시킨다는 전략적 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측면 또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정치적으로 중국에 앞서 對ASEAN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한국과의 FTA 논의와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도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일본의 對ASEAN FTA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 즉 중국의 對ASEAN 접근 견제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간 경제관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상호 의존·보완 및 경쟁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는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한·일 FTA 체결 논의에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對韓 무역·투자정책은 중국, ASEAN 등과 달리 특별히 의도된 정책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투자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를 보여 온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對아시아 통상정책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핵심적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일본은 한·일 FTA를 근간으로 對ASEAN, 對中 FTA를 순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협상추진과 기대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중국경제에 대한 공동대응 채널 구축 등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한·일 양국간 FTA 협상의 향후 전개에 대해서도 양국간 무역역조 등의 문제로 인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는 對日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중남미지역

1990년대 이전 일본은 자국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주요 자원개발의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對중남미 무역·투자 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서의 對중남미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의 對중남미 경제협력관계는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자금협력 및 ODA 원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일본의 對중남미 무역·투자 비중은 1960~70년대에 비하여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중남미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는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국가들은 FTA 체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1998년 이후에는 일본이 이들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가시화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본이 아시아를 뒤로 하고 對중남미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중남미국가와 FTA를 체결한 구미기업과의 관세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본기업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서는 자국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입 여건을 향상시켜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중남미국가와의 FTA를 통해 북미·EU지역에

대한 교두보로서 활용한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들어 일본은 멕시코, 칠레 등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對중남미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나. 통상정책의 향후 전망

여기에서는 FTA 정책을 근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과 향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현단계에서 일본의 전체적인 통상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시기적으로 유사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가장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의 FTA를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본의 지역별, WTO와의 관계 및 국내경제의 구조개혁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망 및 문제점은 향후 對日 FTA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지역별 통상정책 전망

가) 구미지역

우선 일본과 미국의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2000년부터 3년간에 걸쳐 감소함에 따라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1년 6월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공동선언한 ‘미·일 경제성장 파트너십 형성’을 위하여 양국은 앞으로 거시정책 조정, 규제완화, 구조조정, 투자 및 시장개방 등의 측면에서 적극 협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DDA협상 과정에서의 현안과제에 더하여, 미·일 각국의 지역간 또는 양자간 경제현안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자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규제 및 구조개혁 추진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양국의 마찰문제가 개별적으로 전개되어 온 경향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도 재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일 FTA 구상논의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본 내의 반응은 점차 對美 FTA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경제연대 및 안보 강화 차원에서도 미·일 FTA 구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과 EU간에는 일·EU 정상회담, 일·EU 각료회의, 일·EU 고위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통상문제를 위시한 제반문제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비록 EU와의 무역비중이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과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철강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조치나 WTO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문제 및 DDA협상 문제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상대로서 EU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M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견지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일본과 EU간에 무역 측면이나 FTA 측면에서 뚜렷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양측은 상호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방면에 걸쳐 대화의 채널을 확대시키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으로 해석하면 이미 일본과 EU는 향후 FTA 구상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사전 준비작업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 있어서 ASEM과 WTO를 통한 EU와의 상호협력문제는

일본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아시아지역

일본은 급속한 중국경제의 위상변화를 반영하듯, 對中 협력관계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對中 FTA까지 체결된다면 일본기업의 對中 수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對中 기대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극복한 후에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은 중국과 ASEAN간의 FTA 체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빨리 체결되느냐 하는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 선점을 당한 일본으로서는 중국보다 한 차원 높으면서 보다 더 매력적인 對ASEAN FTA 구상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이 ASEAN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극복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對아시아 통상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對中 FTA 추진은 앞으로도 일본의 중점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일본은 국익과 주도권 확보라는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對ASEAN 통상정책은 ODA를 중심으로 한 경제원조에 의해 전개되어 중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정책방향은 중국의 부상과 對ASEAN 접근을 억제하고, 일본기업의 對中 위협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의 對ASEAN FTA 체결은 상술한 요인에 더하여, 기존의 ODA를 대신하여 ASEAN의 일본시장 진입여건을 완화하면서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까지의 對ASEAN 통상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에 있어

ASEAN과의 FTA는 중국과 동일하게 농업 등 산업의 구조개혁을 수반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중국의 존재를 감안하면 오히려 구조개혁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은 마침내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을 통해 2005년까지 FTA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한 상태이다. 이는 곧 양국 모두가 FTA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에는 반대의견 또한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양국간 무역역조 심화를 초래하는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은 가장 예민한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어, 일본의 양보와 한국의 적극적인 해소방안 노력이 향후 전개과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한일 FTA를 기점으로 對아시아 FTA 정책을 전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설정 여부는 여타 아시아국가들과의 FTA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對韓 협상과정에서의 일본측 대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 중남미지역

일본의 對중남미 통상정책은 기존의 무역·투자 및 ODA 등을 통한 자금협력 위주에서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한 FTA 추진을 위한 통상전략을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는 일본과 중남미 국가간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이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멕시코간 FT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멕시코를 중심 매개체로 활용하는 중남미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론 양국간 FTA 체결은 2003년 10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여전히 상호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으나, 양국간

FTA 체결은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멕시코의 일본 농업시장의 개방이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양국간 FTA 체결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어, 향후 일본정부의 정책판단이 주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만일 농업문제로 인해 對멕시코 FTA가 지연될 경우, 농수산물 수입규모가 멕시코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과의 FTA협상 전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멕시코간 FTA는 농업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포함하는 본격적인 FTA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아시아국가와의 FTA협상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향후 전개될 對칠레와의 FTA 체결논의에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으로서는 신중하고 구체적인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칠레간 FTA 구상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멕시코와의 FTA 체결 내용과 유사한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의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 WTO 내에서의 역할

1955년 GATT 가입 이후, 일본은 GATT/WTO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무차별원칙·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더욱이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WTO 회원국들과 공동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라운드의 조기실시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FTA를 중심으로 지역연대 및 경제협력관계를 전개하면서도, WTO 체제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은 무차별원칙·다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WTO 체제와 이 원칙의

예외로 규정된 FTA간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WTO가 FT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FTA가 무역왜곡효과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²⁾

물론 일본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FTA 추진에는 WTO와 FTA간의 긴장관계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지만, 만일 미국을 비롯한 EU 등의 FTA 구상에 참여해 나갈 경우에는, WTO 체제가 유명무실화되거나 또는 세계가 선진국 중심의 WTO권과 그 외 경제권 중심의 FTA권으로 분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DDA협상은 난항을 보이고 있어,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은 WTO 다자간 협상의 정체가 FTA의 급속한 확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FTA로 인해 WTO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일본에 있어 小貪大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즉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개방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FTA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자간 협상 기관인 WTO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는 重層的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은 큰 이익을 누려왔으며, 미국과 EU 등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확립의 차원에서조차 WTO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일본은 향후에도 WTO 내에서의 자국의 역할 정립과 활동 폭을 적극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렇듯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WTO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스스로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82) WTO(1998, 2000) 참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EU는 WTO를 통하여 미국의 슈퍼 2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선택의 여지가 세 가지 이상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WTO라고 하는 다자적 차원의 국제기구, NAFTA와 APEC 등의 지역경제권, 미·일과 같은 양자간 협상 등의 세 가지 선택 중에서 자국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세계 각국과 자유롭게 무역하는 것이 가장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선택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WTO를 발전적으로 확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WTO를 육성하고 성장시켜 그 유효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WTO의 제협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구조개혁의 가속화

일본의 통상정책이 전환을 모색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에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부문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FTA를 통해 무역 및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2001년 내각부에 경제·재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인 부실채권 처리문제와 이를 통한 디플레이션 극복에 모든 정책이 총동원된 상태이며, 특히 국제발행 규모를 30조 엔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의 긴축재정을 통해 심각한 재정적자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하에 세계개혁도 진행중에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농업, 상공, 세계 등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정치적 영향이 가장 심한 정책분야이기에, 줄곧 일본의 국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의 개방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FTA 추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더 진지하고 과감한 농업부문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계기로 제2, 제3의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 농업문제가 커다란 장애물로 대두된 상태이다. 특히 농산물을 수출하는 ASEAN 및 중국과의 FTA 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부문 역시 혹독한 구조조정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팽배하다. 더욱이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중·ASEAN간 FTA 관련소식은 일본에 큰 충격이었다. 일본은 곧바로 ASEAN과 FTA를 전제로 한 포괄적 경제연대강화 구상을 제안했으나,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은 ASEAN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농업보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과 농업부문의 자유화 없이는 제2, 제3의 FTA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외교상의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농업보호를 계속해 나갈 경우, 무역정책보다는 국내 보조금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적다고 할 수 있어, 적어도 EU의 농업정책과 같이 국내 보조금 중심의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자민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를 개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표본인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부문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각 부처간 및 이해집단간 이견차이로 인해 이렇

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4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하여 도시보다 지방의 부동산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는 여전히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일본의 농업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이다.

2. 일본 통상정책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다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특히 일본의 통상정책은 우리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 통상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의 對세계 및 對日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

1) 균형적인 지역별 통상정책 전개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변화에 편승하면서 급속히 변화해 왔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한국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일본은 세계적인 FTA 체결 조류를 직시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다자주의와 병행하면서 양자간 FTA를 중핵으로 하는 지역주의로 적극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성장 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아시아 통화위기 등을 계기로 과거와 달리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적극적인 對아시아 통상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변화를 연계하여 고려해 보면, 일본의 통상정책은 FTA를 핵심 통상정책 수단으로 하면서도 그 대상지역은 아직 아시아와 중남미에 국한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여전히 WTO 체제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시아 내에서도 특정국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및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노력하는 이유는 일본의 지역별 경제관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여전히 역외의 미국이며, 미국은 일본과 안보동맹관계에도 놓여있어 일본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아울러 미국에는 못 미치나 EU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및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미국이나 EU와의 접점은 아직 WTO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여전히 일본은 WTO가 표방하는 다자주의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자국의 강력한 경쟁력 발휘를 유감없이 지원해 주는 WTO를 통해 지금까지도 커다란 편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체제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FTA를 정식으로 발효시킨 국가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체결된 칠레와의 FTA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거대한 세계적 지역주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아직 FTA가 산업공동화 등 기업 및 산업의 도태는 물론 사회적 병폐를 불러온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항상 최선책만 추구하기보다는 차선책의 선택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미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첨단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강국이며,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가진 시장으로서, 對美 관계의 중요성은 당분간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이는 EU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도 설령 지역주의화 추세에 편승한다 하더라도 이와 함

게 여전히 중요한 역외시장인 미국, EU 등과의 관계유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보다 신중한 對中 전략 수립

일본의 對中 전략은 우리의 對中 전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본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對中觀에는 기회론보다 위협론이, 그리고 낙관론보다 신중론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FTA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어 한·중 FTA 혹은 한·중·일 FTA 체결을 선호하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이러한 신중론의 이유로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이제 겨우 WTO에 가입한 국가로서, 중국이 내세우고 있듯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과도기에 있어 아직도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경쟁, 자유무역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對中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당분간 시기상조이며,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공동화 방지도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내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양국은 치열하게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일환에서 FTA도 지나치게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사실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하에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기존 안보체계의 일대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對中 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對中觀은 우리도 어느 정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을 쉽게 생각하고 진출했다가 낭패를 본 경

힘이 적지 않음을 볼 때, 對中 진출의 손익을 보다 냉철하게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또한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우리의 사정은 일본과 다소 상이하다. 우리는 일본과 같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중국을 보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의식도 적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對日 의존도 및 반일감정으로 인해 막연한 親中 의식이 무의식중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시각은 미국이나 일본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對中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데 따른 對中 의존도 증대와 이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해야 할 사안은 아닌가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ASEAN, 러시아, 미국까지도 포함하여 각각이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관계유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對동아시아 FTA 전략 전개

일본은 전반적인 아시아 중시로의 궤도수정을 하는 가운데에도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부상, 아시아의 영향력 증대, 아시아와의 상호의존성 심화에 대해 일본은 특정국과의 FTA에 치우치기보다는 동아시아 경제연대 등 적극적인 對아시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물론 자국 농산물분야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본이 의도한 바대로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며, 이는 일본이 갖고 있는 최대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두고 對아시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 ASEAN 각각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특징과 이들 국가·지역간의 유기적인 역내분업체계가 가져올 경제적 효율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에는 거대시장과 노동력을, 한국에는 기술제고와 구조개혁 촉진을, ASEAN에는 거대 통합시장과 일본의 중급 기술제품의 생산거점 제공을 각기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한·일 FTA 체결이나 한·중·일 FTA, 한·중 FTA 등이 마치 대체관계에 있는 듯이 논의되고 있을 뿐, 아시아 전체의 역내분업 및 지역협력구도의 모색과 그 틀 안에서 각 국가 및 지역과에 FTA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은 수없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對日 의존도 못지 않게 對中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주는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한·일 FTA를 對日 무역적자라는 현안에 집착하여 양자적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한국의 FTA 전략 차원에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가려져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ASEAN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 발 늦었으나 현실에 입각한 對ASEAN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ASEAN에 대해 중국과 달리 개별국가에 대한 접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ASEAN 각국의 경제격차 및 개방정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중국도 결국은 2010년에 ASEAN 전체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타결이 가능한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판단은 일본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일면 ASEAN의 사정에 맞는 접근방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對아시아 FTA 전략은 원칙적으로 한·중·일과 ASEAN 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FTA(EAFTA)를 중핵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노정에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의미를 충분히 담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ASEAN 개별국과의 FTA 체결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 즉 한편으로 對ASEAN, 다른 한편으로 ASEAN 각 회원국별로 개별 접근하는 전략을 상황에 맞게 시의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

나. 對日 대응방안

1) WTO 체제에서의 한일 공조 강화

일본은 WTO를 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GATT의 분쟁해결 절차를 가급적 피하고 상대국과의 양자간 해결방식을 선호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규모 對세계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미국과 같이 빈번한 무역마찰을 일으킬 경우 타국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0여 년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WTO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WTO에서 일본과의 공조체제를 도모하는 정책적 전개가 필요하다.

한편 WTO의 DDA협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반덤핑 코드(GATT 제6조의 실행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규율 강화와 투자규범의 책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미 일본정부는 도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을 통하여 반덤핑 코드 및 보조금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는 곧 일본이 1990년대 후반 들어 FTA를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WTO의 부분적 한계에 대한 보완이지 대체는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WTO에서의 일본의 노력을 거울삼아 한국도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반 통상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해 나가기 위해 일본과의 공조를 적극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일본과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의 농업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협력 하에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에 대한 급격한 관세인하가 초래되지 않도록 무리한 관세 상한선 설정을 적극 제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인하를 적게 하는 대신에 허용해야 할 저율관세수입량(TRQ)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협상의 세부원칙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보조금 감축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한일 FTA 실현을 위한 일본의 리더십 촉구

우리에게 있어 일본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중요성은 명확해진다. 일본경제에서 점하는 한국의 지위에 비해 한국경제에서 점하는 일본의 지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비록 과거에 비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결과 일본에 대한 관심도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존재를 신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에 있어 한국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면 우리의 중요성 또한 정확히 나타난다.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에서 점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일본 내에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급속한 對中 관계진전을 보면서 일본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FTA 전략에 있어 한국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즉 일본은 한국을 동아시아 FTA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의 對韓 FTA 정책 또한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상호에게 아직도 협력의 의의가 크다는 사실은 한·일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때 한·일 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 출발점에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의 리더십 발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촉구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상호 신뢰관계 구축에 저해되는 일본측의 무분별한 언행은 자제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FTA를 통한 일본의 리더십 발휘가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하며, 동시에 우리는 국내에서 부품·소재산업의 인식전환과 감정적인 對日 감정의 지양을 적극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이 일·멕시코 협상에서 보인 소극적인 자세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일 FTA협상시 일본의 농산물 분야에 대한 양허안은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는 향후 전개될 농업대국인 중국이나 미국과의 FTA를 의식하고 국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제조업 분야의 소극적 개방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제조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 또한 장기적으로 한·일 FTA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FTA의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면 일본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면 우리 또한 그에 상응하는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일본과의 FTA협상에서 제조업의 본격 개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개방의 충격으로 양국의 피해 집단이 단기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동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일본과 한국은 공교롭게도 FTA 체결 대상이 매우 유사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산업구조의 유사성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수출구조의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지역 내의 더욱이 근린국으로서, 양국의 대외통상전략은 서로를 다분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양국은 동아시아 FTA 추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양국간 FTA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기 한·일 FTA 체결 이후에도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FTA를 추진하기보다는 한·일 FTA 추진 이후의 전략을 한·일간 협력의제로 상정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유럽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6개국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출발하여 처음부터 FTA가 아닌 관세동맹을 출범시켜 여타국의 합류를 용이하게 했으며, 그 이후 관세동맹은 통합의 깊이와 넓이를 축적하여 실로 지금과 같은 거대한 유럽통합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FTA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이를 양국이 어떻게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공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일 FTA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한·일 FTA는 결코 전략적인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며 주변국으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한·일 FTA가 초래할 負의 효과를 궁극적으로 EAFTA에서 상쇄하지 못하고 한·일 FTA만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한·일 FTA가 EAFTA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정신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한일 협상에서 발현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한·일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시에는 여타국을 배려하여 여타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축하기보다 동아시아 무역자유화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국에 대해서는 한·일 협상내용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양국이 비관세장벽 해소를 제도의 투명성과 선진성 제고의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일중간 FTA 경쟁에서 중재자의 역할 모색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구현한다는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이 구상실현에 있어 대외적으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가. 동북아 구상에 대한 부정적 혹은 냉소적 시각을 가진 대다수의 지적은 한국이 경제중심 혹은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발상의 비현실성에 모아진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구상을 볼 때, 현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외부에 비취지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직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지정학·지경학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주요국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은 주도자이기보다 중재자임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간의 FTA 경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Baldwin(2003)은 한·일 FTA가 일본이 중심(hub)이 되고 한국이 이를 지탱하는 주변(spoke)이 되며, 동아시아 FTA가 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FTA 경쟁의 결과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중심과 이를 연결해 주는 다수의 주변으로 형성되는 자전거의 양 바퀴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hub and spoke’ 식의 FTA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초래하는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를 야

기할 뿐만 아니라, 중심(hub)으로만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위축효과를 가져오며, 생산입지의 관성을 초래하여 FTA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한편 주변성(peripherality)을 자초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든간에 일본과 중국이 상호간에 견제와 배제를 지양하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일본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보다는 한·일 및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긴밀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모두 FTA 경쟁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동아시아 FTA 구상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도록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일·중간 FTA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일·중 FTA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일본과 중국이 FTA 체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어느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FTA 전략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므로 주요 경쟁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체결시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체결시의 불이익도 감안하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들어 한국은 FTA 미체결국가로서 차별적 대우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차별이 적은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또한 일단 FTA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특정이해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국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

이며, 국민적 화합과 공통의 가치관을 양성해 나가는 데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준동. 2003. 「‘WTO DDA협상’ 보건의료분야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 2003-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 2003a. 「한·일 FTA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대외전문가풀 토의자료 2003-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b.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추진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양희·김종걸. 2001.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조사분석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은지. 2002. 『일본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지역리포트 0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성섭. 1998.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 조사분석 9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상열·이홍배. 2001.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주요 對日 수입품목의 국내 시장 침투현황, 전망 및 대책」.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준석. 2003. 「WTO와 국제규제조화」. 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 2003-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왕윤중 외. 1996. 『WTO 체제의 정착과 新통상의제』. 정책연구 96-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용석. 1998. 「세계경제의 신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37권 제2-3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오영교. 1994. 『일본 통상산업성의 실체』. 포도원.
- 외교통상부. 2002. 「한·칠레 FTA 협상 체결」.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 이호철. 1996.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 이홍배. 2003. 「일본 지역특구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배·岡本信廣. 2002.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정책연구 02-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배. 1999.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및 한국에의 시사점」. 『KIEP 세계경제』 제2권 제 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훈이홍배. 1998.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과제』. 자료논문 98-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훈. 2002. 『1990년대 일본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지역연구회시리즈 0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KOITS DATA BASE」.

[외국문자료: 일문]

- 影山喜一. 1999. 『通商産業政策論研究』. 東京: 日本論評社
- 上條俊昭. 1985. 『米國の腕 日本の手: 日米經濟摩擦 讓歩の效用』.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川勝平太. 1997. 『文明の海洋史觀』 東京: 中央公論社.
- 小宮隆太郎. 1994. 『貿易黒字・赤字の經濟學: 日米摩擦の愚かさ』.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小寺彰木村福成. 2001. 「東アジア自由貿易地域形成の課題と戰略」 東京: 日本機械輸出組合.
- 木村福成・鈴木厚. 2003. 『加速する東アジアFTA』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 中川旬司. 2001. 『摩擦から協調へ: ウルグアイラウンド後の日米關係』. 東京: 東信堂.
-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各年度.
- _____. 2003. 「政府開發援助(ODA) 白書 平成14年版」.
- 日本國際協力銀行. 2002. 「わが國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報告書」.
- 日本貿易振興會. 『投資白書』, 『貿易白書』 各年度.
- _____. 2003. 「經濟連携について」.
- _____. 2003. 『ジェットロ貿易・投資白書 2003年版』.
- _____. 2002. 『ジェットロ貿易・投資白書 2002年版』.
- _____. 2002. 「地域貿易協定における自由化の例外問題 -NAFTA, FTAA, AFTA-」.
- 日本農林水産省. 2003. 「自由貿易協定を巡る各國との議論の狀況と今後の対応」.
- _____. 2003. 「日・メキシコ FTAの交渉狀況」.
- 日本財務省. 『對外・對內直接投資狀況』 各年度.

- 日本アジア經濟研究所. 2003. 『ワールドトレンド』. 日本アジア經濟研究所.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02. 「日本を巡る自由貿易協定の効果: CGEモデルによる分析」.
- _____. 2001. 「日本企業のグローバル化に関するアンケート」.
- 日本經濟團體聯合會. 2003. 「WTO加盟後の中國との通商・經濟關係の擴大に向けて」.
- _____. 1999. 「日本-メキシコFTAの我が國産業界への影響に関する報告書」.
- 日本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編. 2002. 『不正貿易報告書 2002年度版』.
- _____. 2002. 「日・ASEAN間の貿易關係」.
- _____. 2002. 『わが國企業の海外事業活動(第30回)』.
- _____. 『通商白書』 各年度.
- 日本機械輸出組合. 2000. 「メキシコにおける貿易・投資の問題の改善を要望」. 『JMC Journal』 6月號.
- _____. 2000. 『メキシコを巡る自由貿易協定の動向』.
- _____. 2001. 『主要な自由貿易協定の現状と法的分析』. JMC Journal 6月號.
- 日中經濟協會. 2003. 『東アジア市場統合への道—中國とFTA』.
- 宗像直子. 2001. 「日本の地域經濟綜合政策の生成」, 『日中關係の轉機』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丸屋豊二郎・石川幸一編著. 2001. 『メイド・イン・チャイナの衝擊』.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 佐佐木隆雄. 1997. 『アメリカの通商政策』. 東京: 岩波新書.
- 佐藤定幸 編. 1992. 『日米經濟摩擦の構圖』. 東京: 有斐閣.
- 青木健 外 編. 2002. 『日本の通商政策入門』.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青木健 2002. 「東アジアにおいて低下する日本のプレゼンス」 『國際貿易と投資』. 東京: 國際貿易投資研究所.
- 荒船清彦. 1995. 『様變わりの中南美と日本: その光と影』 世界經濟評論 6月號.
- 秋山憲治. 1994. 『日米通商摩擦の研究』. 東京: 同文館.
- アン・O・クルーガー(星野岳穂 外 譯). 2002. 『アメリカ通商政策と自由貿易 體制』.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石川博友. 1995. 『日米摩擦の政治經濟學: プラザ合意から10年』.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 石井一生. 2000. 『日本の貿易 55年』.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 岩田一政 編. 2003. 『日本の通商政策とWTO』.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李鴻培. 2002. 「韓國の輸入先多角化制度の廢止が韓國經濟に与える影響分析」.
『創価大學大學院紀要』第23集. 東京: 日本創価大學.
- 伊藤元重 外 編. 1994. 『貿易黒字の誤解: 日本經濟のどこが問題か』.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浦田秀次郎 外 編. 2002. 『日本のFTA戰略』.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浦田秀次郎 編著. 2002. 『FTAガイドブック』.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 浦田秀次郎木下俊彦. 2000. 『アジア經濟: リスクへの挑戰』. 東京: 海外投融 資情報財團.
- 津久井茂充編. 1993. 『ガットの全貌』. 東京: 日本關稅協會.
- 竹中平藏. 1994. 『日米摩擦の經濟學』.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富浦英一. 1997. 『戰略的通商政策の經濟學』.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細川 恒. 1999. 『大競争時代の通商戰略』.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외국문자료: 중문]

- 中國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國際貿易」各年度.
_____. 『中國統計年鑑』各年版.

[외국문자료: 영문]

- Asean-China Export Group on Economic Cooperation. 2001. “Forging Closer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EAN Secretariat*. October.
- Asean Development Bank (ADB). 2002. *Key Indicators 2002*. ADB.
- ASEAN Secretariat. 2002. *Statist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2002*.
- Balassa, B and L. Bauwens. 1988. “Intra-industry Specialization in a Multi-country and Multi-industry Framework”. *Economic Journal*. Vol. 97. pp. 923-939. Balassa, B and L. Bauwens. *Changing Trade Patterns in Manufactured Goods: An Economic Approach*. New York : Elsevier.
- Bergsten, F. C., T. Ito, and M. Norand. 2001. “No More Bashi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 Bhagwati, Jagdish. 2000. *The Wind of th Hundred Days :How Washington Mismanged Globalization*, Cambridge. MT and London : MIT Press.
- _____. 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 An Overview," *New Dimension in Regional Integration*, edited by Jaime de Melo and Arvind Panagariy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Melo, J. and A. Panagaria eds. 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it A. K. and D. Stiglitz. 1977.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76(3).
- East Asia Vision Group. 2001. *Toward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 Feldstein, Martin. 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Vol. 77, No. 2, March/April
- Fujita, M., P. Krugman, and A. J. Venables. 2001. *The Spatial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 Helpman, E. and P. Krugman. 1985.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Cambridge : MIT Press.
-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0. "Community Building in Asia Pacific Dialogue in Okinawa." Tokyo, New York.
- Igawa, K. and B. Kim. 2001. "A Note on Possibilities about Japan-Korea Free Trade Area : A strategic Approach". *Kobe Economic & Business Review*, 44th.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Kim, Yanghee. 2004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 : Korean Perspective". *Economic Analysis of the Japan-Korea FTA*. Tokyo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 Krugman, P . 1991. "Is Bilateralism Bad?" *International Trade Policy*. edited by Elhanan Helpman and Assaf Razin. Cambridge, Mass : MIT press.
- _____. 1984. "The U.S. Response to Foreign Industrial Targeting,"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 Lee, HongBae. 2002.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Working Paper 02-18*.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 Leon , Hollerman. 1988. *Japan's Economic Strategy in Brazil :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Lexington Books.
- Mundell, R. A.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 *American Economic Review* 51. Sept.
- Ohki, N. 2002.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East Asia's IT Industry." Chapter 4 in the *'IT' Revolu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eds, M.Kagami and M.Tsuji.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 Rodrick, Dani. 1995. "The Limits of Trade Policy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Philip King ed.,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A Reader*, 2nd ed., New York : cGraw-Hill. pp. 231-246.
- Scollay, Robert and John P. Gilbert. 2001.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the Asia Pacific?*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Sudo, Sue . 2002.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Japan and South East Asia*. London : Routledge.
- Susan Kaufman Purcell and Robert Immerman. 1992. *Japan and Latin America in the New Global Order*.
- _____. 1990. *The U.S., Japan, and Latin America : Prospect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 World Bank . 200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03*.
- _____. 199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7*.
- _____. 1993. "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WTO. 2002.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By Type of Agreement*. As of 30 June.
- _____. 1998. 2000. *Trade Policy Review - Japan*.

Executive Summary

Changes in Japan's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Korea

Hongbae Lee *et al.*

'From multilateral to bilateral'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TA-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 in 2002.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Japan, which is neighbor to Korea and shares many similarities and a close economic relationship, has responded to overall environment changes and promoted its trade policies. It also takes a regionalism-based look at how FTA, a center of Japan's trade policy, has progressed, and with what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offers suggestions and future policy responses to Japan's trade policy shifts that have effected Korea.

Chapter 2 of this paper deals with Japan's trade environment and policy shift. It provides basic material and information in such a way as to facilitate an understanding of Japan's latest trade policy shift and its details.

Chapter 3 through Chapter 5 will addres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FTA-centered trade policies for geographical analysis. Chapter 3 will first take a look at policy details and content for the United States. The regional policy becom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basic structure of Japan's trade policy as the United States has the most powerful influence on economy,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in Japan. Chapter 4 will investigate how Japan's trade policy has shifted from ODA to FTA. For this, a thorough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how differently bilateral trade policies have been made on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China, ASEAN and Korea. Chapter 5, Trade Policy for Latin America, will first focus on the overall aspects of Japan's trade policy for Latin America,

focusing on Mexico and Chile, and looking into the progress of the recent conclusion of an FTA with Chile.

Chapter 6 will cover Japan's overall trade policies and offer future prospects and challenge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implications and responses for Korea in view of both general aspects and policy responses to Japan.

李鴻培

日本 創價(Soka)大學校 경제학과 졸업

日本 創價(Soka)大學校 경제학 박사

日本 아시아경제연구소(IDE)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現, E-mail: hb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공저, 2002)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A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2002)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과제』 (공저, 1998) 외

金良姬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日本 東京(Tokyo)大學校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kyanghee@kiep.go.kr)

(兼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著書 및 論文

“Economic Analysis of the Japan-Korea FTA” (2004)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 (공저, 2003)

「한일 FTA와 외국인투자 -정책과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2002) 외

金恩志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한양대학교 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eunji@kiep.go.kr)

著書 및 論文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02)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200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공저, 2000) 외

程 勳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日本 一橋(Hitotsubashi)大學校 경제학 박사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조교수(現, E-mail: hchung@incheon.ac.kr)

著書 및 論文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02)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공저, 1997)

「美國 對外直接投資의 결정요인과 日本市場의 폐쇄성에 대하여: 製造業의 立地에 관한 실증분석」 (『日本經濟研究』, 1996) 외

政策研究 03-09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2003년 12월 23일 인쇄
2003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발행처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김이 정보인쇄 전화: 2267-0900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179-5
89-322-1072-1(세트)

정가 7,000원

Changes in Japan's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Korea

Hongbae Lee *et al.*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이것은 지금의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는 重層的 통상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기조 변화는 2002년 일·싱가포르 FTA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통상정책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으며, 현시점에서 일본 통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FTA 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가를 주요 지역별로 분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1179 FAX: 3460-1144



정가 7,000원